



다산인권센터

Dasan for Human Rights Center

우)442-3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humadasan@hanmail.net

홈페이지: www.rights.or.kr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합본 1호
2000/2001/2002

다산 주간인권신문 인권



☞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산인권센터

합본1호
2000/2001/2002

100호 발간되는 내지

주간인권신문

다산 인권

☐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100호 합본호를 내며

“우리는 먼저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을 방치한 모든 법 제도를 고발할 것이다. 절반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과 그 안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인권무의식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하고 차별로 대응하는 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며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2000년 10월 4일 창간사 중)

먼저 지금까지 다산인권센터와 주간 '다산인권'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간 '다산인권'은 지난 2000년 10월 4일 창간한지 2년여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 100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100호를 합본호로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간사에 밝힌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이며, 기사내용이나 편집 형식 그리고 기자의 자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100호 합본호를 내면서 다산인권센터로서는 주간 '다산인권'이 단순히 전국과 지역의 인권소식을 전달하는 매체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지역에서 시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과 역동적인 운동성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고, 찾아갈 인권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사회의 척박한 인권현실에서 과연 인권운동이 지역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의 일천한 인권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좌충우돌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간 '다산인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산인권'이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을 일정부분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며 지역의 인권을 투영하고 투쟁해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찌 몇 줄의 기사로 인권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담아낼 수 있으며 그 수많은 아픔과 기쁨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산인권'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인권침해의 실상을 이 '다산인권'의 지면을 통해 크게 외쳐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합본호가 여러분들의 인권현실을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합본호를 내면서 앞서 밝힌 창간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산인권센터와 주간 '다산인권'이 흔들림 없이 올곧게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

다산인권센터

목 차

부록 『다산인권』 합본 1호 색인

/235

창간준비 제1호(2000. 8. 23)

/1

- 1면 ·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화보상 신청 - '민주화 보상법' 시행에 따라 해직교사 110명 우선 접수
· '다산인권'이 격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2면 · '민주화 보상법'의 의의와 한계 - 역사적 정당성 확보 불구 보상수준 머물러
· "매항리사적장은 미 군수업체의 무기실험장이다" - 집시법으로 구속된 주민들, 보석 석방 기대돼
· [인권마당] 집회 혼잡부담금案,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군부정권 부역자 이병희 동상 철거하라

창간준비 제2호(2000. 9. 6)

/3

- 1면 · 노동자 권리찾기 '힘겨운 싸움' 승리 - 안성 동방제약, 188일 파업투쟁 끝에 극적 타결
· [인권계시판]
- 2면 ·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 민주노총 경기지부 도내 7곳에서 노동탄압정책 규탄 천막농성 중
· 매항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폐쇄조치
· "평생 불안에 떨 순 없다" - 향남면 제약공단내 방사선조사 멸균기 공장설립 취소
- 3면 · [인권의 눈] 어느 쓸쓸한 재판 - 김철준 변호사

창간준비 제3호(2000. 9. 20)

/6

- 1면 · "우리도 엄연한 노동자다" - 골프 경기보조원들
· 『다산인권』 10월4일 창간합니다
- 2면 · 골프장 자치회 근로자 인정 안돼
· [인권단상] "인권은 최우선의 가치"
- 3면 · '수집권운동 수원연대' - 국기법 관련 조례제정 촉구
· 고천만 경찰연 의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 [인권계시판]

창간호(2000. 10. 4)

/9

- 1면 · [창간사] 진실의 힘으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겨냥하겠습니다
· 『다산인권』 지면 안내
- 2면 · "우리도 등지 틀고 노동3권 도전합니다" - 수도권레미콘운송협의회, 오는 11월 정식 출범
· "비정규노동자에게 근기법을 보장하라"
- 3면 · 이번엔 서울에서 Anti Globalization 깃발을
· [인권계시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방법
- 4면 · [현장취재] 매항리에 핀 평화의 꽃
· [인권단상] 누구를 위한 산업평화상인가
· [인권의 눈] 진정한 원원게임
· [인권마당] 보안관찰 정보 공개 거부는 알권리 침해 / 페미니스트 예술행사, 전주 이씨 종친회 급습으로 무산

제2호(2000. 10. 18)

/15

- 1면 ·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
· [인권계시판]
- 2면 · 국내 11개 인권단체, 아셈민간포럼탈퇴 - "아셈회의동안 인권침해 감시할 터"
- 3면 · 아셈 2000 민간포럼 열린다
- 4면 ·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 엿보기"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 5면 · [인권의 눈] 청소년의 말 할 권리
· [인권마당] 지난해 국보법 관련 구속자 2백86명 / '베트남전 심포지움' 참전군인단체 방해로 무산

수원인권영화제 특집호(2000. 20. 25)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27일~1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 '자본에 맞선 인간과 영상의 연대'

/19

제3호(2000. 11. 1)

- 1면 · 고문의혹 파출소 지하실 확인 - 외국인노동자 고문수사진상위 현장조사
· 가평 농장서 이주노동자부부 강제노역
- 2면 ·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연대 -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 주제로 수원인권영화제 쟁점토론 열려
· [인권게시판]
- 3면 · [인권의 눈] 우리가 이 여성을 죽였다
· 삶 속에 스며든 인권연대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성황리에 막 내려

/22

제4호(2000. 11. 15)

- 1면 · "고문수사 입증할 충분한 근거 있다"
· [인권게시판]
- 2면 · [인권단상] 죽은 자의 인권
· 한국군 민간인 학살 입증 미국 기밀자료 공개
- 3면 · [인권의 눈]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호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인권마당] "알몸수색 손해배상하라" / 시위교사 또 알몸수색

/25

제5호(2000. 11. 29)

- 1면 · 낙타아저씨들 조직노동자의 대열에 - 건설운송노조, 12월 3일 설립보고대회 갖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
· 인권게시판
- 2면 · 일방적 희생 강요에 다시 일어난 노동계-노동계,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악 저지 공동투쟁 나서
· [인권단상] 에바다의 희망을 접을 것인가
- 3면 · [인권의 눈] 차 우선 정책에 밀려난 보행권
· [인권마당]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돼 /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된다

/28

제6호(2000. 12. 13)

- 1면 · "혹한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 용인 한성CC 경기보조원 208명, 부당해고 반발 134일째 천막농성
· 건설운송 노동자 한 깃발아래 모였다
- 2면 · 학교폭력 방관자 심판대에 세운다 - 오는 17일 '2000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모의재판 열기로
· 일본군 '성노예 전범' 단죄 - 국제법정, 히로히토 전 일왕 등 8명 유죄판결
· [인권마당] "국보법 폐지하라" 19개 인권단체 성명서 / 올해 최대 인권뉴스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 / 미 국 170만개 대인지뢰 "70%가량 한국에 있다"
- 3면 · [인권의 눈] 해고도 서러운데 '왕따'까지
· 인권개선 한목소리 낸다 - 민변 민교협 인권단체, 국보법 폐지 철야농성 돌입

/31

호외(2000. 12. 18)

- 1면 ·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법 제정하라" - 인권단체들, 18~23일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돌입

/34

제7호(2000. 12. 27)

- 1면 · 노조가입 이유로 내쫓기는 낙타아저씨들 - 레미콘회사 곳곳서 노조탄압
· [한해를 보내며] 인권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 여유가 없습니다
- 2면 · [인권마당] 국보법 구속 최형규 1월 5일 첫 공판 /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출범
- 3면 · [인권의 눈]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은 없다
· 인권단체들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 돌입 - 19개 단체들 28일부터 명동성당서

/35

제8호(2001. 1. 10)

- 1면 · "개혁입법 외면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 인권활동가들, 13일간의 단식농성 풀며 국회의사당 기습 시위

/39

· [인권게시판]

- 2면 · 영화20도 강추위도 그들을 격지는 못했다 - 농성단 찾은 국회의원들 잇따른 소금세례 맞고 발길 돌려
· "내가 잘못 살아 젊은이들 고생하는디....."
- 3면 · [인권의 눈] 생명 앞에 자본의 논리 안 된다

제9호(2001. 1. 31)

/42

- 1면 ·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 수원 팔달구청 용역동원 노점상 강제 단속... 노점상들 생존권 보장 집회
- 2면 · "하루 벌어 하루 먹고하는데 어찌라고" - 서민 올리는 마구잡이 노점상 단속... 생존권 보장해야
· [인권단상] 노점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인권마당] 전태일, 김상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 / "고문 못 이겨 전향했다"
- 3면 · [인권의 눈] '살색'과 인종차별
· 여성인권 무시한 성희롱 가해자 복직 결정

제10호(2001. 2. 14)

/45

- 1면 · '허울뿐인 인권위법안' 철회하라
·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 - 국보법질의서 25% 답변...인권단체들 조만간 명단공개
- 2면 · 환자는 어찌란 말인가 - 수원 백성병원, 병동간호사 대거 부당 발령...노조탄압 조합원 강한 반발
· [소장 취임사]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 3면 · [인권의 눈] 역(逆)억압을 넘어서는 성 표현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경기남부지역단체들 14일 한나라당경기도본부서 집회

제11호(2001. 2. 28)

/48

- 1면 · "불평등 소파개정 받아들일 수 없다" - 27일 국회 통의동위 소파개정안 통과...국민행동 김판태 할부
· 개혁 의지 상실한 정부를 규탄한다 - 27일 개혁실종규탄 수원지역203인 시국선언 발표
- 2면 · 종교 강요에 거리로 나선 교사와 학생들 - 안양성문고 종교의 자유 침해 등 파행운영 문제제기
· 교도소부지 고층아파트건설 철회하라 - 수원교도소부지에 35층 아파트건설, 시민단체들 반발
· [인권마당] 외국인노동자 항소심서 10년 실행 / 재건축부조합장 분신 경찰 재수사
- 3면 · [인권의 눈] 벼랑 끝에 선 대우노동자들의 분노

제12호(2001. 3. 14)

/51

- 1면 ·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라" - 지노위 노조 합법성 인정 불구, 집회 참여 부천 레미콘노동자 강제연행
· [필름속의 인권을 잡아라] 제1회 다산 작은 인권영화제 - '대지의 소금'
- 2면 · 합법집회 강제 저지로 노점상인 10여명 부상 - 수원 팔달문 노점상 집회 저지 용역단속반 폭행 휘둘러
· [인권단상] 학생들 대상 지문채취 강요 '반인권적 교육발상'
- 3면 · 아이 앞에서 폭행...알몸 수색까지 - 대우차사태 곳곳서 인권침해, 인권단체들 조사 결과 드러나
· 수원농생고와 함께 인권교육
· 경기 민중연대 출범한다
· [인권마당] 경찰 폭력시위감시단 구성 논란 / 임순애 구명운동 나섰다

제13호(2001. 3. 28)

/54

- 1면 · "야, XXX야..." 경찰 여성활동가에게 성폭력 발언 - 군산서 경찰, 금요집회 참석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 무국장에게 폭언
· 학습권 침해 장애인 대학생 학교 상대 첫 소송
- 2면 · "레미콘운송기사 노동법상 명백한 근로자" - 서울지노위, 구제신청서 심판서 결정...사측 부당노동행위에 쫓겨
· 폐교설 나도는 가운데 교사 철야농성 돌입 - 안양 성문고 사태 갈수록 악화
- 3면 · [인권의 눈] 교육감선거와 학생들의 권리
· 강압수사 제동 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제14호(2001. 4. 4)

/57

- 1면 · [HOT NEWS] 경찰, 사건 터지면 학생, 민중진영 일단 용의자로 - 경기지방경찰청, 학생, 사회단체 대상 수

- 원 노동사무소 화재사건 무리한 수사 벌여
- 2면 · [인권의 눈] 미군의 인권과 한국인의 운명
 - 매향리로의 초대 - 제3회 보름달 축제 4월 7일 매향리에서 열려

제15호(2001. 4. 11) /59

- 1면 · [HOT NEWS] 노동운동가 박태순 의문사 진상 밝혀야
 - [인권단상] 화염병 시위 배후자를 긴급수배한다
- 2면 · 경기여연, 호주제폐지 앞장서기로
 - 부당노동행위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 건설운송노조 10일 대규모 집회, 중노위 합법적 파업권 인정
 - 국보법 폐지 공개서한 발송
 - 매향리 주민들 1억 3천만원 배상 판결 - 11일 서울지법, 미 공군폭격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제16호(2001. 4. 18) /61

- 1면 · [HOT NEWS] 사법부, 레미콘불하차량 운송기사 "근로자"로 인정 - 인천지법 부천지원 17일 노조법상 근로자 결정, 운송기사들 노동3권 확보
 - [작은인권영화제] 충무로, 영화 그들의 노동 - 겨울밤이야기를 듣다(A Winter Night Story)
- 2면 · "인권이 죽은 사회" - 인권단체들, 공권력의 인권유린 강력 대응...규탄집회, 해외단체와 연대
- 3면 · "미온적 태도...눈치보기" - 수원 국회의원들 국보법 질의서 답변
 - [인권의 눈] 국경없는 마을을 향하여

제17호(2001. 4. 25) /64

- 1면 · [HOT NEWS] 91년 5월, 그 죽음을 기억하는가 - 강경대군 비롯한 11명의 젊은이 폭압정치에 죽음으로 저항...10주기 맞아 잊혀진 역사 재조명
 - 레미콘조합원들, 한밤중 용역들에게 집단 구타당해 - 구로 제일레미콘 10여명 조합원들 집단폭행에 감금, 차량 및 통장 빼앗겨
- 2면 · 최형규 항소심서 선고유예로 석방
 - 여성 범죄 법적 심판받는다
 - [인권의 눈] 민주주의의 틀을 짜야 한다

제18호(2001. 5. 2) /66

- 1면 · [HOT NEWS] 공권력 인권침해 더는 안 된다 - 인권위법 30일 국회 통과...실효성 발목 잡는 조항 여전
 - 노동절, 그 이후 - 제 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보고
- 2면 ·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으로 정상화 길 찾아 - 지난 30일 추가 선임된 이사 송탄등기소에 등기신청
 - 나와 세상을 사랑하자 - 수원지역단체, 5일 어린이청소년한마당 열어
 - 경기시민운동연대준비위 발족

제19호(2001. 5. 9) /68

- 1면 · [HOT NEWS] 경기남부지역 공안탄압 진행 중 - 지방노동사무소 사건 구속자 속출, 경찰 조직확대, 인권침해수사에 학생진영 반발
 - "횡령 임금 지급하고 노조 인정하라" - 경기노조 안산분회 조합원들, 청소업체 노조탄압 맞서 싸움
- 2면 · [인권의 눈] 소년범에 대한 범죄자의 시선을 거두어야
 - 시대 읽는 '청년강좌' 열린다
 - 다시 보는 인권 명화 - '5. 5인권영화제' 18일 개막...팔레스타인 분쟁 작품 대거 선보여
 - 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창당

제20호(2001. 5. 16) /70

- 1면 · [HOT NEWS] 사학 민주화 앞장섰던 교수노조 이용구 위원장 구속 - 10일 재단 비리 파헤친 이교수 명예훼손으로 구속...사학민주화 탄압 교수노조 등 10개 단체 반발
 - '학교 화장실 청소 대행' 선심으로 신문구독을 확장 - 수원 일부 초등학교, 청소대행 조건 학생들에게 소년조선일보 구독 권유
- 2면 · "건설일용직 근로조건 개선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하자"

- [인권의 눈] 매향리 승소, 그 의의와 문제점
- [작은인권영화제] 편견속에 갇힌 이반, 그들의 따스한 삶 '슈가 힐, 이발소 이씨'

제21호(2001. 5. 23) /72

- 1면 · [HOT NEWS] '전시에 학생들 강제 동원하겠다' - 오마이뉴스,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문건 공개...정부의 '군국주의 발상' 충격 일파만파
 - [작은인권영화제] 필름에 담긴 동성애자들의 삶과 사랑
- 2면 · 청소년들의 "알립휴먼라잇즈" - 26일부터 청소년 인권강좌 열려
 - [인권의 눈] 그들도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 "홈페이지 게시판 글 삭제 부당하다" - 수원경찰서, 수원시 인터넷 조례안 표현자유 침해 지적

제22호(2001. 5. 30) /74

- 1면 · [HOT NEWS] 지속된 구타에 탈영, 정신치료...은폐까지 - 수원 남부서 의경들, 출동 직전 구타 집중돼
- 2면 · 지금 안산은 노조 탄압의 무법지대 - 안산 동아공업노조 64일째 천막농성...환경미화원들 무더기 부당해고
 - 외국인노동자노조 국내 최초 출범
 - "인사비리 교육감 공개 사과하라" - 전교조경기지부 28일 무기한 천막농성

제23호(2001. 6. 7) /76

- 1면 · 경찰, 의경 구타 사실 인정...징계조치 - 경기경찰청, 1일 감찰 결과 구타 사실 확인
 - 파행 파행 파행의 에바다 - 구재단측, 민주적 이사전에 대해 선임취소가처분신청 제출
- 2면 · [인권의 눈] 1인 시위 활성화되어야 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끝내 실행 선고

제24호(2001. 6. 13) /78

- 1면 · 도내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 파업 돌입 - 민주노총경기본부, 도내 30여 개 사업장 파업...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요구하며 총파업
 - [2001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친구야, 성난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 2면 · "서장 파면, 청장 공개사과하라" - 지역단체 15일 항의집회 갖기로
 - [인권의 눈] 노동자 배제한 국민경제가 낳은 비극
 - "6. 15 공동선언 즉각 이행으로 통일 앞당겨야" - 경기지역단체들 14일 6. 15선언 1주년 공동 성명서 발표

제25호(2001. 6. 20) /80

- 1면 · 경찰, 해머 들고 건설운송노조 여의도 농성장 급습 - 차량 부수고 조합원 301명 연행...시민사회단체들 "합법 파업 짓밟는 공권력 폭거" 규탄 성명서
 - [작은인권영화제] 신자유주의의 심장에 활을 쏜다 '짜빠띠스따(Zapatista)'
- 2면 · [인권의 눈] 변호관 없이 달리는 미군들
 - "경기경찰청장은 지역단체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 노조간부 연행, 용역강제 급습

제26호(2001. 6. 27) /82

- 1면 · 합법 파업 막는 경찰 폭력에 강경 대응 - 경기민중연대, 도내 농성장서 폭력 자행 공권력 규탄 집회 열기로
 - 수원단체들, 경찰청 항의 집회
 - [논평] 기회는 이 때다, 무소불위 힘 휘두르는 공권력
- 2면 ·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 [인권의 눈] 집중단속에 침해받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조 인정할 수 없다" - 26일 국회 상임위서 유진축 이같이 주장...건설산업연맹 부당노동 중단 촉구

제27호(2001. 7. 4) /84

- 1면 · 민주노총 7월 5일, 정치총파업 돌입 -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노동자 총궐기...경기본부도 7일 집회 열기로

- 가자! 놀자! 부대끼자! - '알럽휴먼라잇즈' 여름캠프 떠나자
- 안양장애인복지관 노사교섭 난항
- 2면 · 호주계 폐지운동에 앞장 - 7월 5일 기념식 가두서명 전개
- [인권의 눈] 정례화된 세무조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 "인터넷의 자유를 지켜라!" - 인터넷 등급제 반대, 500여 개 홈페이지들 사이트 파업동참

제28호(2001. 7. 11) /86

- 1면 · 김칠준번호사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김번호사, 12일부터 레미콘운송기사 노조 인정 요구하며...이 용식위원장도 순회단식 중
- [논평] 죽음 부른 가정폭력 가해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 2면 · '반부패' 공개 수업 나선 전교조경기지부 - 도 교육계 인사바리 척결 위해 공개수업...도교육청, 불법행위로 간주
- 에바다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 8월 11일 수원 통일축제한마당 펼친다 - 수원제단제, 제7회 통일한마당 행사위 12일 발족...6. 15선언 실현 방침

제29호(2001. 7. 18) /88

- 1면 · "유진기업 사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43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 18일 노조탄압 자행 유재필 구속수사촉구서 대검찰청에 접수
-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단체협의회(가칭) 창립 - 30여개 인권시민단체들, 19일 국가인권위 올바른 실현 위해 다시 결합
- 2면 ·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 -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 첫 공동 시국기자회견 개최
- [작은 인권영화제] 시애틀 투쟁, 그날을 기억하자 '시애틀 투쟁기록'

제30호(2001. 7. 25) /90

- 1면 · 유재필 처벌 1000명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24일 시민사회노동계 유재필 처벌 시민고발대회 연 뒤 접수, 구속 수사 촉구
- 경기지역, 공무원 노조 출범 박차 - 25일 경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출범...10개 지부 3천명 회원
- 2면 · 경기지역 통일 향한 힘찬 행보 - 6. 15남북공동선언 실현 경기통일연대(준) 27일 토론회 개최
- [인권단상]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제31호(2001. 8. 8) /92

- 1면 · 불량레미콘 사실에도 사업자 비호하는 산자부 - 100인 위원회, 10일 오전 11시 30분 산업자원부 앞 규탄집회...7일 장문기위원장 석방
- 2면 · 에바다복지회, 정상화 갈 길 바쁘다 - 7일 민주적 이사진 4명 추가선임
- 경기민중연대(준), 경인총련탄압 강력 반발 - 6일 수원지검에 공개질의서 보내, 12일 수원 팔달문서 항의집회 예정
- 6. 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통일행사

제32호(2001. 8. 16) /94

- 1면 · 오산시, 전국 처음 직협소속 공무원징계 말썽 - 17일 징계공무원 경기도소청심사위에 소청제기...전공련, 시민단체 강력대응
- [작은인권영화제]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기록, 인혁당
- 2면 · 레미콘운송기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다. - 13일 노동법학자 21명, 기자회견을 통해 레미콘노동자 인정요구
- 레미콘 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결 및 결정 내용

제33호(2001. 8. 22) /96

- 1면 · "나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있다." -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디지털로 공동으로 서울지법에 이동권침해 손해배상청구
- [작은인권영화제] 1975년 4월 9일 '사법사상 암흑의 날'
- 2면 · 한총련 대의원 구속, 제동걸렸다 - 수원지방법원, 제9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첫 영장 기각
- 100인위 레미콘 사업자 구속처벌촉구 기자회견
- 삼성해고자들 수원삼성전자 앞에서 연대집회

제34호(2001. 8. 29) /98

- 1면 · 또! 또!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연행 - 비정규직 대책위, 국회의원사당 진입시도
- 수원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 본격시동
- 2면 · [기고] 수구 언론과 야당에 위해 조작된 매카시즘 선풍 - 8, 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제35호(2001. 9. 5) /100

- 1면 · 결혼앞둔 신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 경인총련학생들, 수원지검 앞에서 연일 격렬한 항의시위 벌여
- [단상] 신랑없는 결혼식
- 2면 ·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내부워크샵

제36호(2001. 9. 12) /102

- 1면 · 철도노조, 본격 민영화저지 투쟁 박차 - 11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2001년 철로역정' 순회공연 진행
- 청소년모의법정 대본공모 시상식 열려 - 대상작: 극적 반전과 선명한 주제의식 돋보인 '굴레를 벗어나'
- 2면 · 신랑없는 눈물의 결혼식 - 김건수석방대책위원회, 수원지검 앞에서 매일 1인 단식 시위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다녀와서

제37호(2001. 9. 19) /104

- 1면 · 안산시 청소용역업체 합의를 불이행... - 안산시, 합의를 이행촉구 환경미화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작은인권영화제] 팬지와 담쟁이
- 2면 · 경기지방경찰청, 전·의경관리 문제있다
- [인권의 눈] 모든 전쟁은 폭력이며 범죄이다

제38호(2001. 9. 26) /106

- 1면 · 인권위원, 불투명한 인선과 국제기준 미흡 - 24일, 국회의 여야 인권위원 4명 추천발표
- 안성축산민영화(사기업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소동...민영화반대투쟁 3인 체포영장발부
- 2면 · No war! YES peace!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주대 다산관 강당에서 열려
- [논평] 대응 캠페인?
- '인권의 눈'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인권계시판]

제39호(2001. 10. 10) /108

- 1면 ·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국가인권위? - 9일 인권단체 밀실인선 규탄속에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
- 경찰개혁 미룰수 없다 - 경찰폭력근절과 개혁등...인권단체개혁촉구나서
- 인권위원 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2면 · 경기지역 개인, 시민단체 언론개혁과 조선일보반대운동 본격 시동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주간 선포 - 수원지법 앞 1인 릴레이시위, 수요집회 등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 일정과 장소 옮겨

제40호(2001. 10. 17) /110

- 1면 · 민주노총 경기본부 17일부터 무기한 천막철야농성 돌입 - 8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단병호위원장 석방대책위 발족
- [작은인권영화제] '구타 유발자... 잠들다(Four million blows)', '남정순, 엄마누라줌마(Don't cry mommy)'
- 2면 · 범민련 경인연합 '범민련 강령개정 설명회' 가져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신고접수, 고발 예정
- 인권단체, 대통령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선언운동전개

제41호(2001. 10. 24) /112

- 1면 · 초지일관 흔들리는 교육정책! -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 집회강행

- 동아타이어(주) 인권유린, 산업연수생 파업, 단식 돌입!
 - 수원지역 시민단체 전쟁반대 캠페인 나서...
- 2면 · 구치소내 폭력행위 사망자에 대해 원고승소판결
· [인권의 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제42호(2001. 10. 31)

/114

- 1면 · 에바다 농아학교 무기한 휴업 - 교장실 집기와 유리창 파손, 올해만 벌써 2번째
·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상정" 엠네스티 지지성명
- 2면 · 시대흐름 역행한, 국방부의 복지부동! - 국방부, 집총 거부자들에게 대해 대체복무수용 절대불가 밝혀
·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11월 3, 4일 청소년문화센터 g.o Festival 열려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제43호(2001. 11. 7)

/116

- 1면 · '인터넷 내용등급제 결사 항전' - 폐지요구...1인 릴레이 단식 이어져
· 하반기 전 민중 투쟁 본격화 예고
· 심시장, 업무복귀 앞서 수원시민에게 사과하라 - 수원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 2면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제44호(2001. 11. 14) - 영화제 특집호

/118

- 1면 · 시민사회단체 전국적 규모의 "(가칭)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구성에 돌입
·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 2면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 살얼음 듣는 한복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하나 당신을 만나러 간다

제45호(2001. 11. 21)

/122

- 1면 ·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표, 파문 확산 - 인권시민사회단체 강력한 반발...경기지역 오는 23일 테러방지법 반대 성명 밝히기로...
- 2면 · 전교조 총력투쟁 유보 - 교육시장화 저지 과제 남아
· 엑스존에 사이트 폐쇄... - 동성애자 단체 잇따른 성명 발표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막내려 - 조선일보의 황포에 안티 조선게시물 강제철폐

제46호(2001. 11. 28)

/124

- 1면 · 국가인권위원회 당분간 파행운행 계속될 듯 - 관계부처 등의 몰이해, 비협조로 조직구성 조차 못해
· 언론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운동이다 - 오는 12월 1일(토) 경기민중언론시민운동연합 발기인대회 예정
- 2면 · 웃음을 되찾은 게 가장 보람 있었어요! - 매원초등학교에서 작은전시회 열려
·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47호(2001. 12. 5)

/126

- 1면 · 경찰, 12월 2일 전국민중연대 집회에서 폭력진압 물의 - 민주노총, 노동파업 농민시위 강경대응은 '끓는 기름에 불지르기' 성명발표
·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곳 - 알림! 휴먼라잇즈! 청소년인권평화학교
- 2면 ·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냐 -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아프간 파병 통과, 비난 이어어...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퇴진을 위한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9일째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공동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백서' 출판기념회 가져

제48호(2001. 12. 12)

/128

- 1면 · 우리는 파병 동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목하겠다 - 12월 11일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 항의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 "군 의문사 여전히 국가책임 없음" 판결
- 2면 · 종중원 자격은 남자만의 것! - "헌법,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발상"
· "전반적인 인권수준 침체" 김대중 정부 들어 양심수 현저히 증가 - 세계인권선언 53주년 성명서, 행사 이어어...

제49호(2001. 12. 19)

/130

- 1면 · 한겨울에 쫓겨나 천막농성하는 노동자들 - 안산 소재 대성산소용역노조 52일째 농성, 용인 소재 세원바이캠 노조 폐업 134일째
· 경찰폭력근절 멀기만한가! - 경찰봉으로 귀, 머리, 다리가격!
- 2면 · 법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인정 판결
· [인권의 눈] 살색 크레파스와 개고기

제50호(2001. 12. 26)

/132

- 1면 ·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 감싸기 처분에 각계 항의성명 잇따라 -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검찰, 레미콘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 2면 · 죽음의 고압선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 미군, 파주시 전동록씨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 없어...
· 다산인권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뉴스 10

제51호(2002. 1. 9)

/135

- 1면 ·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 "폭격소음 인정한다. 항소심에서도 승소" - 매향리 폭격장,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청구 1천여만원 받아들여져
- 2면 · 대체인력 부족, 낮은 급여로 육아휴직신청자 낮아...
· 동성애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가져
· '인도래' 인계동 마을주민신문

제52호(2002. 1. 16)

/135

- 1면 · 경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에바다이사들의 발을 묶다 - 평택 경찰, 에바다 공익이사들의 합법적 출입 막아...
· 청소년 인권사업의 아이디어를 빌립니다
- 2면 · 한통 계약직문제 해결촉구 위한 2차 온라인 시위
· 청소년 인권을 위한 매뉴얼북 "通話, 따르릉..." -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시 청소년들에게 배포
· (가칭)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참가단체들, 워크샵 가져...

제53호(2002. 1. 23)

/139

- 1면 · 이왕지사 옮길 것, 미국으로 가라! - 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송파, 성남, 수원 지역 주민들 반발 거세 게 일고 있다
· 이주노동자 100여명 체불임금지급요구하며 파업돌입
- 2면 · [인권의 눈]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조건없는 산재적용을...
· [안내] 경기지역 계도지와 기사실 문제 간담회

제54호(2002. 1. 30)

/141

- 1면 · 비교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미군이전의 문제.. 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고? - 경기도와 수원시 가장 소극적 답변... 비난 여론 높아져
·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판결 나와...
- 2면 ·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기아자동차노조, 구속된 노조원들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훈장은 박탈되고 그는 이제라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 유진종합개발(주)회장 유재필의 국민훈장모란장 수여에 부처

제55호(2002. 2. 6)

/143

- 1면 · 부시, 당신의 입국을 불허한다 - 오늘부터 부시 방한 반대투쟁 본격 시작
·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겠다" - 김상완, 민주노총경기본부 새로운 일꾼 뽑혀
- 2면 ·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불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이 주간에 경기지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56호(2002. 2. 20)

/145

- 1면 ·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25일 총파업 돌입! - 민주노총, 주5일근무제 개악저지 등을 위한 2월 총파업지침 내려보내...
·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앞두고, 인권시민단체 21일 긴급기자회견
- 2면 ·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수원지역 공대위(준) 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 경찰청, 매춘업소 인권유린 대책 그 실효성 의문
· 부시 평택방문, 반대집회 열린다

제57호(2002. 2. 27)

/147

- 1면 ·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 파업은 생존상 결단! - 대법원, 조폐공사 파업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유죄판결
· [사고]
- 2면 · '테러라 굶쇼?' - 상공회의소 구속수감자 석방하라. 반미감정 고조

제58호(2002. 3. 5)

/149

- 1면 · 또 다시 폭력으로 얼룩진 예바다 - 김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난동, 법인 사무국장 집단 폭행
· [단상] 前과 後, 또 다른 출발을 위하여
- 2면 · 국가의 테러를 방지하자! - '제2의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 높아
· 김건수, 서울고법서 실형
· 수원지역 국회의원, 미군기지 이전 반대입장 표명 - 수원시, 시의회 모두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제59호(2002. 3. 12)

/151

- 1면 ·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문제다 - 사회복지노동자 주당 52.6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사이버 시위'
· 새학기 경기지역 대학교 분규로 진통 - 문제의 재단이 학내분규 원인제공
- 2면 · [인권의 눈] 공존과 인정을 위한 첫걸음, 이름을 부른다는 것
· 예바다복지회 이사회, 예바다사태 공식입장 표명

제60호(2002. 3. 19)

/153

- 1면 · 공무원노조, 24일 출범 - 정부 '불법간주 단호저지' 충돌 불가피, ILO 공무원노조 인정 권고
· [논평] 예바다 폭력, 그 배후세력을 수사하라
- 2면 · 미군기지 이전 결사반대로 경기도 들썩 - 국방부 애매모호한 답변 일관, 지역단체 반발 거세
· 외노협,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중지 촉구

제61호(2002. 3. 26)

/155

- 1면 · 정부의 초강경, 총파업으로 맞선다 - 민주노총 긴급대의원대회에서 4월 2일 전면총파업 돌입 결의
· [다산인권포럼] "지역에서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2면 · 의경실명 구속 대학생, 실형 선고 - 경기도경, 민중대회 관련 경원대학생 연행
· [인권의 눈]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 [게시판]

제62호(2002. 4. 2)

/157

- 1면 ·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연합토지관리계획 경기도민 조직적 반발, 대규모 경기도운동본부 구성예정
- 2면 · 한총련 대의원 수배학생, 부모앞에서 강제연행당해 - 한총련 대의원 10여명 구속 중
· 애도(哀悼)의 단상

제63호(2002. 4. 9)

/159

- 1면 · 한총련 이적규정, 이제 그만! - 한총련 범사회인대책위, 한총련 강령개정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 "민주당, 테러방지법에 목숨걸었나?" - 민주당, 테러방지법 4월 임시국회에 수정안 마련 통과입장
- 2면 · [인권의 눈] 위협한 학교길
· [게시판]

제64호(2002. 4. 16)

/161

- 1면 ·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수원공무원노조 조합원, 수원시청 앞에서 30일까지 1인시위
· [다산인권포럼] "그녀의 죽음에 공소시효는 없다" - 수지 김 사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문제
- 2면 · 장애인의 날은 차별철폐투쟁의 날! - 4.20장애인차별공동기획단 장애인 7대 요구사항 기자회견
· [논평] 국가인권위를 진정합니다?
· 4. 20 장애인철폐투쟁 공동기획단 투쟁 일정안내(16일-20일)

제65호(2002. 4. 23)

/163

- 1면 · 집배원노동자, 안전사고 사망자 5년 동안 117명 - 비정규 집배원노동자 장시간노동으로 고통, 노동기본권 보장 시급
· 학교는 신문지국, 교사는 신문배달부? -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204개 분회, 소년00일보 구독거부선언운동 전개
· [다산인권포럼] "그녀의 죽음에 공소시효는 없다" - 수지 김 사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문제
- 2면 · [인권의 눈] 진보적 인권운동을 생각하며
· [게시판]

제66호(2002. 4. 30)

/165

- 1면 · 전공노수원지부 2일 천막농성 돌입 - '고용직공무원 고용 승계' '지부장 중징계 철회' 요구, 수원공대위도 29일 기자회견문서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 경기지역 대학생 70% 공무원노조지지 -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 9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안내] 세계인권포스터전
- 2면 · "인권침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 국가인권위법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인권위 한계 집중 거론돼
·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 [게시판]

제67호(2002. 5. 7)

/167

- 1면 · 다른 월드컵을 준비하자 - 국내외 노동인권단체, 아동노동 철폐 등 월드컵 캠페인 예정
·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반대한다 - 공대위 6월말까지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안내] 세계인권포스터전
- 2면 · 미 상공회의소 접거농성 구속자 14명 전원 석방
· [인권의 눈] 불법 양산하는 외국인력정책
· [게시판]

제68호(2002. 5. 14)

/169

- 1면 · 수원시장, 전공노수원지부장 해임키로 - 13일 심 시장, 허지부 해임 결재 경기도에 올려, 전공노 수원지부와 수원공무원공대위 강력 반발
· [단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희망
- 2면 · "한번 한총련은 영원한 한총련?" - 14일 또 한총련 관련 학생 구속, 16일 아주대에서 한총련합법화 문화제 개최
·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지수는 얼마? - 5월 청소년인권익의식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7월 청소년 모의법정대본 공모 사업, 11월 청소년모의법정 행사 이어져
· [게시판]

제69호(2002. 5. 21)

/171

- 1면 · 발전노조 인권침해 조사나서 - 인권단체, '발전노조 공동조사단' 구성해 16일부터 조사 착수
· 노동자와 아동의 노동착취를 고발한다 - 공동행동, 27일부터 아시아노동자 초청해 월드컵캠페인 진행
- 2면 · [월드컵 기획기사] ① 월드컵이 노동자 생존권 제한할 수 없어
· 월드컵을 볼모로 삼는 노동자?
·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입법청원"

제70호(2002. 5. 28)

/173

- 1면 · 수원30%이상, 최저임금위반사업장 - 공동감시단, 수원지역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 경기도민은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을 반대한다 -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민 10만명 서명용지 경기도의회에 전달
- 2면 · [월드컵 기획기사] ② “추악한 아동노동에 레드카드를”
-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노동착취 반대”

제71호(2002. 6. 4)

/175

- 1면 · 군부대 초기사망, 유가족 진상요구 - 군가협, 6월 군의문사규명과 군폭력근절 홍보의 달 행사진행
- 미국이여! 페어플레이를 해라? - 5일 수원 미국경기 맞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예정 - 초긴장상태
- 2면 · [월드컵 기획기사] ③ 노점상에게 월드컵은 고통입니다
- “이익을 제기합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라급쇼~”

제72호(2002. 6. 11)

/177

- 1면 · “소수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인권사회단체들, 2002년 양대 선거 참정권 대응키로
- 체천시장 장애인차별 손배소 제기 - 국가인권위 진정1호 사건, 7일 공대위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요구
- [작은인권영화제] ‘박통진리교’
- 2면 · [월드컵 기획기사] ④ 겁에 갇힌 집회의 자유
- “전동록씨의 명복을 바랍니다”

제73호(2002. 6. 18)

/179

- 1면 ·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사망 - SOFA 개정으로 재판권 행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있다 - 대전지법, D학교 학내 집단따돌림 사건 대전시에 책임 물어
- [다산인권포럼] “한총련 이적규정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 2면 · 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차별행위’
- [게시판]

제74호(2002. 6. 25)

/181

- 1면 ·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 한총련 합법화 경기지역 대책위(준) 구성, 이적규정 철회운동 확산
- 붉은악마 신드롬의 이유있는 비판 -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월드컵 현상 냉철한 공론화 계기로
- [다산인권포럼] “한총련의 이적규정 이대로 둘것인가”
- 2면 · [인권의 눈] ‘월드컵 열기’ 제대로 보기

제75호(2002. 7. 2)

/183

- 1면 · 여중생 참사사건 공분확산 - 유족측, 미군에 형사고소 - 미군영내 진입기자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샵(교사직무연수)”
- 2면 · “인류의 이름으로 전쟁범죄 단죄” -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한국도 시급히 비준해야

제76호(2002. 7. 9)

/185

- 1면 · 용산미군기지 어디로 갈까? - 국방부 관계자, “기자들에게 이미 미군이전관련 내용 브리핑했다”
- 전지윤 학생, 5년 구형
- [안내]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샵(교사직무연수) /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작은인권영화제] ‘박통진리교’
- 2면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300호 발행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8년간의 인권파수꾼 역할 충실
- [인권의 눈] 월드컵과 이주노동자

제77호(2002. 7. 16)

/187

- 1면 · 폭력으로 가로막힌 에바다 정상화 -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진입했으나 밖으로 밀려 대치 중
- 교사 지위이용 여학생 상습 성폭행 - 여성시민단체들, 검찰 누락수사에 항의하며 구속수사 촉구하고 나서

2면 · 발전노조 파업후 보복성 인권침해 심각수준 - 인권단체공동조사단, 발전회사의 반인권적 노조탄압 폭로

제78호(2002. 7. 23)

/189

- 1면 · 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 서울고등군사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장교 이례적 선고유예판결
- 에바다사태 평택경찰서 직무유기 고소 -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앞 농성풀고 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 2면 · 여성단체 가해자 구속촉구... 검찰 뒤늦은 수사
- 참정권 제한 지문날인반대자 헌법소원 - 지문날인반대연대, 12월 대선까지 행정자치부 앞 매주 1인시위 돌입
- 전국 외국노동자 지원단체들 업무중단, 노숙투쟁

제79호(2002. 7. 30)

/191

- 1면 · 공안당국, 한총련 마녀사냥 또 시작 - 경기지역 인사 1,200명 선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 정신과진료 개인정보제공 사생활침해 - 국가인권위,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징계 및 피해자 손해권고
- 2면 ·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전교조 경기지부, 5일째 경기도교육청 점거농성 식발투쟁 강도높여

제80호(2002. 8. 6)

/193

- 1면 · 레미콘회사들, 조합원상대 수익원 손배 청구 - 법원 징역형 선고 등에 업고 가압류 소송...비정규노동자 인권침해 맞물려
- “수원시민 통일의지 뚫뚫 뭉친다” - 10일 만석공원서 제8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열려
- 2면 · 노동기본권 침해 직권중재제도 철폐하라 - 70개 시민사회단체들,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 “의문투성이 수사 발표” - 민변, 여중생 수사발표 의견서

제81호(2002. 8. 13)

/195

- 1면 · 성폭행 피해자 검찰조사후 자살기도 - 교사 성폭행사실 전면부인, 검찰 당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예정
-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전면적 재검토 요구
- [작은인권영화제] ‘조국은 없다’ / ‘탈북소년 중국에 가다’
- [다산인권포럼]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2면 · 인터넷 토론 전지윤 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 노동자 통일선봉대 100여명, 매향리 미사격장 진입 농성
- 서울시장 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제82호(2002. 8. 20)

/197

- 1면 · 교사 성폭행 고소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 여성시민단체, 검찰의 편파적 수사 거센 반발...엄중수사 촉구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도지사가 나서라 - 경기도지역 시도의원 10여명, 손학규 도지사 공개서한 발표
- [다산인권포럼] “인터넷과 인권”
- 2면 · 인권단체들, 발산역 리프트사고 서울시장 사과 및 국가인권위 해결 촉구나서
- [인권의 눈] 영화속의 재판이야기

제83호(2002. 8. 27)

/199

- 1면 · 인권단체 장애인이동권 동조단식 - 발산역리프트참사 서울시장 공개사과 촉구...인권위 조사키로
- 여성·시민단체들 수원법원 앞 1인시위 - 성폭행피해자 중심 수사,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 [다산인권포럼] ‘사이버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 [안내]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대책위 출범식
- 2면 · 2기 민주화보상심의위원 보수성향 인사 대거위촉
- [인권의 눈] 용역경비업체 농성장 침탈은 명백한 불법

제84호(2002. 9. 3)

/201

- 1면 ·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대의원 무리한 검거로 물의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 박차 - 사회단체협의체, 9월 5일 공소시효배제 입법촉구 의견서 국회제출 예정
 - [안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발족식 - "오~합법! 한총련!"
 - [안내] 청소년인권익식 표본조사 발표 및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 2면 ·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교도소장 징계권고
· [인권의 눈] 떠난 군인들에게 바친다

제85호(2002. 9. 10) /203

- 1면 · 이주노동자 노예사냥, 표적수사 - 법무부, 경찰, 국정원 합동단속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익식 한 눈에 - 다산인권센터, 12일 1800여명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발표회
· [안내] 청소년인권익식 설문조사발표 및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 [다산인권포럼] "미국식 애국주의를 고발한다" - 9.11, 1년 후
- 2면 · 국가인권위, 학교생활규정(안) 개선권고 - 교육부에 체벌금지,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등 요구
· 한총련 합법화 운동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제86호(2002. 9. 17) /205

- 1면 · 미군차량과 충돌, 한국인 사망 - 여중생사망장소와 불과 4킬로 떨어져, 미군 안전대책 신뢰 못해
· [단상]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선택
- 2면 · 경기교육청-교원단체 단체협약 체결
· 수원지검, 관려자 전원 소환 조사 -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판정불가 나와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의 권리찾기

제87호(2002. 9. 24) /207

- 1면 ·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 민주노총도 '노동탄압 분쇄와 부실국정감사 규탄투쟁' 나서
· 이동권연대 39일간의 단식농성 풀어 - 서울시, 저상버스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약속
- 2면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결정 -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인권

제88호(2002. 10. 1) /209

- 1면 · 새만금간척은 미군비행장용? - 새만금간척지 130만평 미군비행장 제공, 시민단체 강력반발
· 경찰, 개인신상정보 유출 인권침해 심각 - 보건소 건강진단발급대장(보건증) 신상정보 임의대로 복사, 사용
· [안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샵'
- 2면 · [안내] 영화패러디포스터 공모전
·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 수원도착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누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제89호(2002. 10. 8) /211

- 1면 · 경찰,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강력계 반장이 학생을 죽도로 구타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을 반대한다 - 각계각층 500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기자회견 열어
· [안내]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2면 · [인권의 눈]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 [안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샵'

제90호(2002. 10. 15) /213

- 1면 · 의문사특별법 개정, 노숙투쟁 - 경찰, 한나라당 앞 의문사 유가족 노숙농성자 무차별 연행
· 경찰의 개인정보유출 국가인권위 진정 - 경찰, 수배자 검거 위해 보건소내 보건증소지자 정보유출 심각
· [다산인권포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안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샵'
- 2면 · 불처벌 협정 제외한 오만한 미국 - 미국의 자국민 불처벌 보장 요구에 '국제법 위반' 거센 비판
· 수원남부서, 가혹수사 관련 경찰 전보조치

제91호(2002. 10. 22) /215

- 1면 · 공무원도 노동자다 - 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 유흥업소 종사의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 업주와 공연기획사들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대책마련 시급
· [안내]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2면 · 국가인권위, 경찰 알몸 신체검사 요건강화 권고
· [기고] 정신장애인들을 인권의 중심에 두고

제92호(2002. 10. 29) /217

- 1면 · 검찰, 성폭행 교사 무혐의 처분 - 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법 개정권고 - 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 [안내]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2면 · 수원의국인노동자쉼터 조례 만든다 -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조례 제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도소등 구금시설 실태조사 발표

제93호(2002. 11. 5) /219

- 1면 ·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해야
· [안내]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상영일정
- 2면 · 검찰 성폭행교사 무혐의 처분에 피해가족 항고의사, 여성단체 규탄집회 열어
· [인권의 눈] 피의자의 인권
· [안내] 청소년모의법정 공모당선작

제94호(2002. 11. 12) /221

- 1면 ·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11월 15일부터 3일간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열려
- 2면 · 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 [안내]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제95호(2002. 11. 19) /223

- 1면 · 공무원노조관련 본격 징계시작 - 경기도 인사위원회, 18일 수원시청 공무원 해임결정
·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 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 [안내]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 2면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인권의 눈]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제96호(2002. 11. 26) /225

- 1면 · 미군 무죄평결에 국민분노 확산 - 여중생범대위, 27일 비상시국회의 갖고 용산 미8군 앞 집회 예정
· [논평] 바로세우자! 국가인권위
- 2면 · '2002 경기민중대회' 경기도청 계란시위 -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 개최 예정
·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선포하자!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4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장례식 준비
· [안내]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제97호(2002. 12. 3) /227

- 1면 ·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분노...분노...분노 - 5일 경기도시국기자회견, 수원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등 도내 항의집회
· 공무원노조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 부당징계 철회, 자치권포기 손학규도지사 퇴진 요구 거세
- 2면 · '노조 인정, 해고자 전원복직' - 행운레미콘 노조, 19일간 천막농성 끝에 사측과 합의
· "인권활동가 만났다" - 인권활동가대회 140여명 참석, 다양한 주제 토론...깊이 있는 논의 아쉬움

제98호(2002. 12. 10) /229

- 1면 ·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 인권활동가들 올해의 인권소식 1위 '여중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 humandasan@hanmail.net

창간준비 제1호
2000.8.23 (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화보상 신청

'민주화 보상법' 시행에 따라 해직교사 110명 우선 접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 21일 전교조경기지부는 교육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거나 해직됐던 교사 110명의 신청서를 경기도청에 일괄 제출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신청서 접수에 앞서 도청 정문에서 약식집회를 가졌다. 이증현지부장은 "민주화보상법의 시행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교육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구속 및 해직 기간에 대한 보상 및

급여지급 등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전교조 관련자 30여명이 접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교조 각 지부를 통해 일괄접수를 마쳤다.

접수 첫날 전교조교사들이 일차적으로 공동 제출하게 된 것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집행위원장 한충목)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접수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경우, 다산인권센터가 경기지역 민주화관련 피해자 보

상 창구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연대는 오는 9월 18일 2차로 노동, 농민, 빈민 등 생존권과 관련된 민주화운동 및 열사들의 사건을 공동접수하기로 했으며, 10월 중순경에는 70년대 정치적 사건 관련자 및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www.krdemo.org, 02-766-4624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다산인권'이 격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계간지 다산인권이 주간 팩스신문으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한다. 그 동안 다산인권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일곱 번에 걸쳐 경기지역의 인권소식을 담아내 왔다. 노동인권은 물론 생활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을 짚어보았고,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고민해왔다. 무엇보다도 인권이 정치적 구호나 운동의 수단인 아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잡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계간지 다산인권은 시사각각으로 터져 나오는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때맞추어 전하기엔 너무도 더뎠다. 솔직히 깊이 있는 토론과 전망을 신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깊이 있는 인권전문지로 발돋움해볼까? 그러다 인권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넓고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이웃에게 이야기하듯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미주알고주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웃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내는 창구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 다산인권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되는 인권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자. 고민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해결의 지혜를 찾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인권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도 눈앞에 있을 것이다.

이제 다산인권은 고자질쟁이가 되려 한다. 오만한 권력과 자본을 고자질하고, 생활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나 관행을 고자질하려 한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무감각한 인권의식을 고자질하려 한다. 또한 많은 고자질을 듣고자 한다. 인권세상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의 이야기든, 그 어떤 이야기든 담으려 한다. 머리길이 3센티의 인권을 외치는 아이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한다.

다산인권이 이주일에 한번씩 팩스나 이메일로 여러분을 찾을 때 이웃처럼 반겨주기 바란다.

역사적 정당성 확보 불구 보상수준 머물러

지난해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 굴곡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정권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해왔던 풍토를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박래군사무처장은 "미약한 수준이나 마 처음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일부 보상이 가능케 됐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의혹에 휩싸였던 의문사의 진실 규명과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법은 98년 4월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주축이 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유가협은 국회 앞에서 4백 22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법 제정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박사무처장은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빠진 채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징계처리지, 미임용자, 수배자, 기소유예자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각종 피해를 입은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이란 규정과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위원회의 권한 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69년 삼선개헌 발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방법은 각 시, 도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및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www.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마당

■ 집회 혼잡부담금案,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최근 서울시의 도심 집회 및 행사시 혼잡부담금을 부과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정면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군부정권 부역자 이병희 등상 철폐하라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 세워진 박정희정권 추종자였던 이병희 등상을 철폐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의원 7선을 지냈던 이병희씨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와 동기며, 5.16군사쿠데타에 참여했고 61년 당시 중앙정보부 서물지부장을 역임했다. 이씨는 "군부정권의 부역자"와 "지역발전의 공로자"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
재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매향리사격장은 미 군수업체의 무기시험장이다"

집시법으로 구속된 주민들, 보석 석방 기대돼

"이번 재판은 매향리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일 정도로 세계적인 재판입니다."

21일 오후 2시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보름달집회 과정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용운(44. 전매향리주민대책위원장)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법 110호 법정. 김용한법대위공동집행위원장(44)은 모두진술에서 매향리 재판이 갖는 성격을 당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계획적인 불법 폭력시위를 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매향리 사격장이 미국 군사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의 무기시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니사격장 정문 부근에 있는 부대 안내판에 'Welcome to Kooni, Lockheed Martin'이라는 영문글씨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록히드 마틴사가 사적으로 무기시험을 하는 곳이 틀림없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매향리 주민과 대학생, 범대위 회원 등 200여명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법원 앞에서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 및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다음 재판을 한달 뒤인 9월22일 오후5시로 잡았다. 이와 관련해 여운철변호사는 "조만간 구속기소된 4명이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 한층 높여주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미 기소된 전만규 매향리주민대책위원장과 이번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 humandasan@hanmail.net

창간준비 제2호
2000.9.6 (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노동자 권리찾기 '힘겨운 싸움' 승리

안성 동방제약, 188일 파업투쟁 끝에 극적 타결

188일간의 파업과 직장폐쇄, 부당해고로 극한 대결을 보이던 안성 동방제약 사태가 지난 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동방제약 노사는 이날 조업 재개, 노조사무실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노조 측의 요구 안에 합의했다.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의 전근대적이며 파행적인 노무관리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조가 설립되면서부터다. 그 동안 이곳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수습에 준하는 열악한 월급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회사측은 직장의보 등 4대 보험 미가입, 전 직원의 80%를 수습의 지위로 규정해 월급 지출을 최소화하기, 시간의 수당 및 연월차 수당 미지급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시간을 밤 9시로 정해 자연스레 야근을 하게 했고,

회의 불참 시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파행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노조원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개월도 채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노조 측은 지난 3월 노조 인정,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회사측은 지난 3월29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이후 회사측은 지난 4월4일 법원에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금지처분신청을 했고, 5월엔 가스총을 착용한 청원경찰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해산시켰다.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회사를 고발하는 등 동방제약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은 회사측이 낸 출입금지처분신청에 대해 사실상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사간의 합의로 사태를 풀어가기에커녕 지난 7월 남아 있는 노조원 16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고, 8월17일 또다시 노조 집행간부 5명을 부당해고시켰다. 사실 그 동안 회사측은 한편으론 노조원들을 정리해고하고 또 한편으론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면 계속)

인권게시판

□매향리 폭력장 폐쇄와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문화제

· 때: 9월23일 오후 3시 · 곳: 매향리
· 누가: 매향리 국제폭력장 폐쇄 대책위원회(031-351-3388)

□매향리 집시법 등 사건 병합재판(전만규주민대책위원장과 김용한 외 2명)

· 때: 9월22일 오후 5시 · 곳: 수원지법 제110호 법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대회

· 때: 9월7일 오후 1시-5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 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 문의: 02-2610-4236, 4156(성공회대 김동준교수)

□민주화운동계승 경기연대 구성을 위한 경기지역 재단체 간담회

· 때: 9월8일 오후 3시 · 곳: 민주노동당 수원, 오산, 화성지부사무실
(031-232-2729)

□ 수원외국인노동자 쉼터 한가위 한마당

· 때: 9월10일 낮 12시 · 곳: 수원시청 대회의실과 쉼터

(1면에 이어) 이날 타결은 박이사가 회사의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공인회계사 출신의 백남춘씨가 새로 영입되면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조업 재개, 노조사무실 보장, 수습 사원들의 수습 해제, 회사 정상화 후 교섭을 재개' 등이다.

노동조합 사무장 박현옥씨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상화 기간 이후 다시 단체교섭 등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조 건설을 위해 188일간의 오랜 기간 동안 파업 투쟁을 해온 동방제약 노동조합원들에게 이날의 합의는 정말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다산**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민주노총 경기지부 도내 7곳에서 노동탄압정책 규탄 천막 농성 중

민주노총경기지부는 롯데호텔 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무력 진압을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37일째 벌이고 있다.

수원을 비롯해 안산, 평택, 안양, 의정부, 부천, 성남 등 경기도내 7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번 농성은 얼마 전 극적으로 타결된 롯데호텔사태와 현재 3개월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탄압과 폭력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폐쇄조치

화성군 우정면, 출입문 등 봉쇄 주민반발

지난 3일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됐다.

지난달 28일 화성군 우정면은 "현재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원래 창고용도였다"며 9월2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급기야 지난 3일 대책위 사무실 출입문은 폐쇄됐고, 현재 대책위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국방부가 매향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매향리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88년 12월12일 전위원장이 폭격장 정문 앞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폭격장 철폐 투쟁을 벌이다 화재가 난 이후 96년 7월부터 현재의 사무실로 옮겨 사용해왔다. **다산**

"평생 불안에 떨 순 없다"

향남면 제약공단내 방사선조사 멸균기 공장설립 취소

지난달 29일 화성군은 향남면 제약공단 내에 방사선조사 멸균기를 설치하려는 (주)소야(대표. 박재돈)에 대한 공장설립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당초 의약품을 생산,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화성군청에 낸 공장설립 허가 신청서와 달리 방사선 조사멸균기를 설치, 실질적으로 멸균서비스업을 추진했다. 원래 공단 내에는 제조업만 들어설 수 있다. 결국 (주)소야는 법규에 위배되는 공장을 짓고자 했던 것.

지난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 1500여명과 공단 노동자들은 공장 철수를 요구하며 수 차례 집회를 가졌다. 그 동안 주민들은 20년 동안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산업폐기물, 오폐수로 몸살을 앓아왔다. 공단을 끼고 흐르는 하천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 지난 달 말엔 박씨가 운영하는 한국파마에서 몰래 산업폐기물을 공단 내에 매립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김용일대책위사무국장(44)은 "공단이 들어선 이후 피해가 많았지만 그냥 묵묵히 참고 살아왔다. 이번에 조금만 유출되도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방사선 물질이 유입됐단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장 취소 결정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환경감시원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0월에 대규모 환경문 화제를 열 계획이다. **다산**

◎인권의 눈 / 어느 쓸쓸한 재판

-김철준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다. 200석의 대 법정은 텅 비어있고, 한 모퉁이에서 그의 아내와 4~5명의 친지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재판은 무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8월 24일, 경기도철거민연합회(경철연) 고천만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는 수원 권선4지구 철거싸움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미 징역3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전과까지 있어서 자칫 6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2년 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의 철거싸움이 시작됐다.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입주권과 가수용시설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물론 재야, 시민단체들조차도 철거민들의 생존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천만의장은 자신도 한 때 철거싸움을 통해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얻어냈던 경험 때문에 이들의 외로운 싸움을 돕게 된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세입자들이 엄포용으로 경찰관에게 사제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언론은 이들을 과격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10여명의 세입자들과 고천만 경찰청의장, 남경남 전철련의장이 구속됐다. 그제서야 수원시는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켰다. 그 후 세입자들은 모두 석방됐지만 고천만 의장은 아직도 이렇게 쓸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대에도 공안사건 재판 때에는 이 법정이 가득 넘쳤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열린 매향리사격장사건 재판 때에도 이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운동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구나...세상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철거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음지에 외롭게 방치되어 있구나...

철거싸움의 정당성에 대해 장황하게 준비했던 구두변론서를 접어버렸다. "저는 지금 피고인을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이 어찌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념에 가까운 변론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최후진술의 시간, 고천만 의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를 위한 사회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변함 없이 억눌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철거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철거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방청객도 없는 대법정에서, 중형을 눈앞에 두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까 희망의 메시지일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저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무겁던 머리가 더욱 아래로 떨거졌다. **다산**

□ 민주화보상법 신청자 접수 창구

- 경기동부: 031-747-2677
- 경기남부: 031-238-0177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민주노총: 031-226-6416

□ 「비전향장기수백서」 출간

비전향장기수들의 삶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글을 엮은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문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02-393-4661)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창간준비 제3호
2000.9.20(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 humandasan@hanmail.net

“우리도 엄연한 노동자다” ... 골프 경기보조원들

노동부 ‘근로자성 인정’에 골프장계 ‘인정 못하겠다’

208명 경기보조원 전원 해고. 골프가 천국인 나라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골프회사측이 경기보조원들(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치회를 만들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난 8월31일 용인시 구성면에 자리한 한성CC측은 회사측이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면서 경기보조원 208명 전원을 해고했다.

지난 18일 밤 9시 한성CC 앞, 경기보조원 노조원들은 노조 인정,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열흘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표정이다.

한성CC 경기보조원은 지난 6월30일 노조를 결성했다. 회사측은 계속 단체교섭을 유보했고, 급기야 지난 8월31일 전원을 부당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지난 8월 중순께 모든 경기보조원들에게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불법적인 행위는 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디보트 백(필드에 나갈 때 메는 골프채가 든 가방)을 안주겠다고 협박했다. 한성CC 경기보조원 노조는 “사측의 요구에 반발한 경기보조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냈고, 지난 8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매일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성CC와 바로 인접한 88CC. 지난 18일 오후 '9월20일부터 직장폐쇄를 한다'는 공문이 나붙었다. 이곳 경기보조원들은 노조 인정,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자치회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곳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지난해 10월6일이었으며 지난 5월 노동부로부터 '88CC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7월 조장 8명으로 구성된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만들면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을 조장에게 위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2면에 계속)

『다산인권』 10월4일 창간합니다

10월4일 『다산인권』이 드디어 인권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겨우 걷는 연습 세 번 했을 뿐인데 제대로 중심이나 잡을 수 있을까. 이 황량한 세상은 다산인권이 온전히 걸어가도록 내버려둘까.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주변 분들의 남다른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다산인권은 제도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하지만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웃들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다산인권에 실린 기사를 보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도 있었고, 인권 칼럼에 감동을 받았다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정기구독하겠다고 연회비를 묻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산인권은 세상을 향해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참 인권세상이란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창간호에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길을 어떤 자세로 걸을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약속을 밝힐 것입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더라도 그 길옆에 놓여 있는 작은 꽃잎, 작은 풀벌레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던지겠다고...



골프장 자치회 근로자 인정 안돼

(1면에 이어) 노조측은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회사측의 위장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놓고 첨예한 노사 대립으로 불거진 것은 이곳만이 아니다.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양프라자, 경북CC 등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최근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는 그 동안 노동계에서 끊임 없이 제기됐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체로 경기보조원을 근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노동부가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잇따른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치회 구성, 용역으로의 전환 따위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을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숙 88CC 경기보조원 노조사무장은 “일하다 다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처럼 우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당연히 근기법상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달 안에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기법에 첨가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골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크게 마스터, 조장,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돼 있다. 마스터는 조장과 경기보조원들을 총 관리 감독하는 사실상 회사측 관리자. 조장은 경기보조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며, 조장들 밑에 배당된 경기보조원들과 한 팀을 이룬다. 경기보조원들은 마스터의 관리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측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설정되며, 따라서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

그런데 현재 회사측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장에게 위임하는 자치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왜냐하면 조장은 경기보조원들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자치회가 운영되면 형식적으로는 경기보조원이 회사측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지난 5월17일 노동부는 자치회가 있는 성남 한양CC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된 조장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자체 징계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반면, 자치회가 없는 88CC에 대해선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산**

인권단상 “인권은 최우선의 가치”

최근 88CC에서 경기보조원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회의를 하거나 부분파업에 들어갔을 때 회사는 단전, 단수와 화장실 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노사분쟁의 현장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고 우리 자신도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 요구방법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만 파악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물이나 전기, 화장실은 사람이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단전단수나 화장실 폐쇄는 인간의 생명,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인권침해는 파업의 정당성 유무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설사 아무리 부당한 쟁의행위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이런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회사의 부당행위를 부각시키는 무기토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어야 한다. 인권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산**

'수급권운동 수원연대' 국기법 관련 조례제정 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조례제정운동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참여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지역 사회복지, 실업극복운동, 자활지원센터, 종교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급권운동 수원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조례제정위원회, 기초생활권리찾기위원회, 자활사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수원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 조례(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편성 및 보장기금에 관한 조례, 수원시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수원시 저소득자활사업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기법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이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 머물러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얻어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서 빈곤층에(4인 가족 93만원이하) 대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급자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수급신청자중에서 탈락자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약 1만4천여 명으로 수급자를 마감할 예정으로 기존의 19,72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중 한시생보, 거택보호 등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산**

고천만 경찰연 의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수원권선 4지구 철거싸움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구속된 고천만 경기도철거민연합 의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 의장은 이미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어 사실상 5년 6월의 형을 살아야 할 판.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이후 상고심이 선고된다면 2년 6월의 형만을 살게 된다. **다산**

「다산인권」 객원기자 (지역통신원) 모집

오만한 권력과 자본을 고자질하고 싶은 분, 생활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나 관행을 파헤치고 싶은 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감각한 인권의식을 고집고 싶은 분,

지역의 인권지기 「다산인권」 팩스신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인권과 영화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원 인권영화제가 어느새 다섯 돌을 맞았습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 인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 들 다 소중히 여기는 분, 그도 아니면 이 가을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 수원 인권영화제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문의: 031-213-2105 박진 정책실장

인권 게시판

- 민주화보상관련 법안 설명회 및 제 단체 간담회
 - 때: 9월20일 오후 2시 · 곳: 민주노총 강당(031-232-2728)
 - 강의: 여운철 변호사(다산인권센터소장)
- 이병희등상철거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 때: 9월21일 오후 7시 · 곳: 수원시민광장 회의실(031-225-9887)
- 시민단체와 전공의 이야기 한마당
 - 때: 9월22일 오후 7시 · 곳: 아주대병원별관 회의실(031-253-2266)
 - 내용: 최근의 의료 사태에 관한 난상토론
- 인권법 공대위 일일호프
 - 때: 9월22일 오후 6시 · 곳: 서울 종각역 3번 출구 파노라마호프뷔페(02-734-4720)
- 대항리 집시법 등 사건 병합재판(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용한 외 2명)
 - 때: 9월22일 오후 5시 · 곳: 수원지법 제110호 법정
- 대항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문화제
 - 때: 9월23일 오후 3시 · 곳: 대항리
 - 누가: 대항리 국제폭격장 폐쇄 대책위원회(031-351-3388)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창간호

2000.10.4(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창간사

진실의 힘으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겨냥하겠습니다

마침내 다산의 인권이들이 화살을 쏘아 올렸다. 벽찬 감동과 웅골찬 다짐으로 인권세상을 향해 '다산인권'이라는 불화살을 힘껏 쏘아 올렸다. 오직 진실만이 가장 큰 힘이라는 믿음으로 시위를 당겼고,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의치 않고 겨냥하겠다는 각오로 첫 화살을 날렸다.

우리는 아직 참 인권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 다수의 힘조차 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유린하지 못하는 세상이라 믿는다.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그에 걸맞은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세상이라 믿는다. 우리는 먼저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을 방치한 모든 법 제도를 고발할 것이다. 절반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과 그 안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인권무의식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하고 차별로 대응하는 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며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의 문제에도 촉각을 세울 것이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보통사람들까지 비참한 삶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지역운동단체, 그리고 지역활동가들이 인권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길 간절히 원한다. 다산인권은 감히 그 통로가 될 것을 자임한다.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에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뜻 있는 분들의 따가운 충고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다산인권을 쏘아 올릴 것이다. 오만한 권력과 자본을 향해 시위를 당기고, 우리 안에 길들여진 야만성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쏘아댈 것이다. 우리가 쏘아 올린 '다산인권'의 불화살이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의 가슴마다 꽃힐 때 인권침해의 현장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가슴마다 꽃힐 때 건강한 인권의식은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 사회를 덮을 것이다. 그때면 인권세상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에 다산인권은 참 인권세상을 여는 오롯한 인권지기가 될 것을 감히 선언한다.

다산인권 지면 안내

「다산인권」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면	지역 인권현황 기사, 인권게시판(행사 일정)
2면	인권기사, 인권마당(인권정보)
3면	인권의 눈(인권칼럼)

'인권의 눈'에 함께 하실 분은 손경미 노무사, 최종식 경기일보 기자,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고길섭 문화비평가(문화연대 편집주간) 등 모두 다섯분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특집으로 5면을 발행했고 앞으로는 3면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다산인권」은 지면을 함께 만들어갈 객원기자 및 지역통신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소식을 알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화: 031-213-2105, 팩스: 031-212-1006, 이메일: humandasan@hanmail.net

“우리도 동지 틀고 노동3권 도전합니다”

수도권레미콘운송협의회, 오는 11월 정식 출범

그 동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레미콘기사들이 권리를 찾겠다며 일어섰다.

수도권 레미콘기사들은 지난 2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도권 레미콘 운송협의회 출범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수도권 일대 17개 레미콘 기사 상호회 회장단 40여명과 이주레미콘 싸움을 함께 해온 김철준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다산인권센터 실무자들과 참

여연대 회원들이 참여했다.

그 동안 레미콘회사와 개별적으로 운송도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운송기사들이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기자 열린 것.

이날 모임은 이주레미콘 싸움이 도화선이 됐다.

이주레미콘회사는 기사들과 고용관계를 맺어오다가 88년부터 강제로 차량을

불하해주고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측은 중고레미콘차량을 이들에게 불하하면서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특히 회사측은 레미콘기사들과 개별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악용, 터무니없이 낮은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저임금구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이주레미콘 수원, 구로, 인천 등 3개 공장 기사들은 회사측에 운송료 현실화, 불공정한 계약의 시정, 상호회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을 요구했고, 지난 5월 회사측은 경영질서 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무더기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레미콘기사들은 이주레미콘운송협의회를 구성하고 70일간 싸움을 벌인 끝에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켰다. 무엇보다도 레미콘 기사 상호회의 협상 대표권을 인정하고 1년에 한 차례씩 협상을 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운송협의회 출범은 이러한 싸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운송기사들이 단일한 조직을 건설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날 레미콘기사들은 오는 11월 정식으로 수도권레미콘운송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레미콘 회사에서 추천된 이들로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해 김철준 변호사는 “이제 레미콘운송기사들은 수도권레미콘운송협의회를 통해 노동3권을 얻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레미콘기사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노조를 건설함으로써 노동3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비정규노동자에게 근기법을 보장하라”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이 없었다. 법원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임금이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사실상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날 제안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보면, ▲ 근기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조항과 관련,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본다”는 별도 조항의 첨가 ▲ 근기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의 첨가 ▲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항 ‘근로자의 해고’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비정규 노동자들도 엄연한 노동자임을 법 조항 속에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산**

이번엔 서울에서 Anti Globalization 깃발을

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가 열린 체코 프라하에선 ‘Anti Globalization’(세계화 반대)의 구호가 드높았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빈곤과 환경파괴를 심화시키는 세계화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거세게 저항했다.

이 저항은 이미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회의, 다보스 세계경제정상회의(WEF)나 방콕의 유엔무역 및 개발기구(UNCTAD)회의 등에서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서울에서 세계화 반대운동이 펼쳐진다.

‘WTO반대국민행동, 신자유주의반대민중대회위원회, ASEM2000 민간단체포럼’ 등의 3기구는 오는 20, 21일 서울에

서 열리는 제3차 아셈회의 기간동안 반세계화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의 국제협약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경제주권 상실반대, WTO반대, 뉴라운드 출범반대의 구호를 내걸었다.

한편, 이번엔 열리는 아셈회의는 아시아, 유럽국가의 정상회담으로 양 대륙간 투자 자유화 및 무역 자유화 강화를 위한 논의는 물론, 뉴라운드 재출범을 위한

양대륙간의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화논리를 유포하는 아셈회의를 규탄하는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ASEM2000 민간단체포럼 인권분과를 탈퇴한 13개 한국 인권단체들은 ‘자본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민간단체 포럼’이라는 독자적인 연대기구를 구성, 행사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감시하고 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민중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산**

저는 신청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방법

1. 법률규정에 의해 정식 공고된 내용

- 신청기간(1차) : 2000. 8. 21. ~ 2000. 10. 20.(신청기간 공고는 몇 차례 계속되며 최종 신청 마감일은 2001. 12. 31.임)
- 신청대상 : 1969. 8. 7.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②상이를 입은 자, ③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④유죄판결, 해직, 학사정계를 당한 자
-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자치행정과
- 조치내용 :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 및 생활지원금 보상, ④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상이자 및 질병자에게 의료지원금 지급
- 이중보상금지 : 국가유공자에우뮨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문의 : 경기도 자치행정과(031-249-3131),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에 문의, 신청서는 행정자치부(www.korea.go.kr) 및 경기도(www.kg21.net)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과 관련한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및 민주화운동계승경기연대의 입장

- 신청자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측면도 있으므로 일단 법정신청 자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되 집단적으로 신청한다.
- 접수거부, 신청기간이 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며, 동시에 법개정운동, 기타 여러 방식에 의한 조직적 운동을 벌여 나간다.
- 자세한 사항은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국민연대(02-766-4624), 경기연대(031-232-3747)로 문의

현장취재/매항리문화제

매항리에 핀 평화의 꽃

지난달 23일 오후, 50여 년 동안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시르죽어온 매항리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고사리손에서부터 펜대에 익숙한 말쑥한 손, 평생 흙에 묻혀 살아온 거친 손까지 모두 평화의 종이꽃 만들기에 참여했다. 그들은 서투나마 정성껏 종이꽃을 만들었다.

“폭격장을 폐쇄하라”고 적힌 편지는 꽃잎이 되어 바람에 나부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비록 종이꽃이었지만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평화의 전령이었다.

이 종이꽃은 철조망 사이사이에 꽃혀 꽃무더기를 이루었다. “매항리를 평화의

68년 미국 시카고에서 베트남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던 한 소녀가 시위대를 막던 경찰들을 향해 건네주던 그 ‘꽃’이었고, 지난 87년 6월 항쟁에서 민가협어머니들이 전경들에게 나눠주던

그 ‘꽃’이기도 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교조, 청년진보당,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등 전국의 단체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2천5백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종이꽃 달기에 이어 “매항리를 평화의 땅으로”란 함성으로 문을 열었다. 노래공연에 이어 매항리 주민들의 싸움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고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하면서 문화제는 절정을 이뤘다.

행사가 열리기 이틀 전 이곳 폭격장이 인천공항과 인접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측에서 이전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국제적인 온라인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또 바로 전날엔 우리나라 평화운동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해외주둔 미군의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매항리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매항리에선 폭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평화의 꽃들은 매항리의 폭음을 잠재워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러나 그 꽃은 저절로 피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무더기는 매항리 주민들의 고단한 투쟁을 자양분으로 피어났다. 평화는 숭고한 피땀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다산**

인권단상

누구를 위한 산업평화상인가

‘전사원 무급으로 1시간 일 더하기 운동실시’ ‘자발적인 임금동결 및 상여금 반납’ ‘열악한 작업환경 및 저임금체제하에서도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었음’ ‘생산성 향상 및 무재해운동 전개’ ‘노조위원장 중심으로 노사화합’...

제2회 2000 경기도 산업평화상 노동단체부문 후보로 올라온 노조들의 한결같은 공적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아니 어떤 상도 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에 보답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운영의 모범적인 상을 제시한다는데 더 큰 취지가 있다. 경기도는 ‘노사화합과 지역산업평화 정착 유지를 위해’ 경기도 산업평화상을 제정했다고 밝혔으로써 이런 취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노조들에게 ‘임금을 반납하고, 노동시간을 자진 해서 늘리라, 노사가 화합해서 생산성 향상에 몰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도대체 평화란 무엇이고 산업평화상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강요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평화, 노동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없는 평화가 진정한 산업평화이다. 그래서 산업평화상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노조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후보의 선정과 평가는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평가기준도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로 대체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기업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이 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 상에서 주어지는 상금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다산**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인권과 영화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원 인권영화제가 어느새 다섯 돌을 맞았습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 인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 들 다 소중히 여기는 분, 그도 아니면 이 가을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 수원 인권영화제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영화제 기간: 10.27~29
· 문의: 031-213-2105

인권의 눈

진정한 윈윈게임

손경미 노무사 / 한맥공인노무사 사무소

“200명을 부당해고 한 000을 규탄한다” 오후 2시가 되자 오늘도 한성CC 경기보조원들의 목소리가 하늘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전경들도 어김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들을 에워싸고 있다. 내용 모르는 시민들은 “법대로 하면 되지 꼭 저래야 하나?”라며 혀를 차고, 산뜻하게 차려입고 나온 골프회원들은 그 놈의 소음 때문에 심신을 쉴 수 없다며 불멘소리를 한다. 아마도 경영주는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앓던 이는 뼈벼려야 해. 파업을 핑계삼아 경기보조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끝까지 가볼테면 가보라지.

기업주는 늘 근로자들에게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회사가 잘 돼야 근로자도 잘 되고 근로자가 잘 돼야 회사도 잘 된다고 말한다. 특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허리끈을 졸라매도록 요구할 때 이 말은 더 험프게 사용된다. 그리고 윈윈게임이라는 신종 용어까지 동원하며 근로자들을 독려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인권을 깨닫고, 단결을 말하는 순간 경영주는 태도를 돌변한다. ‘가족’이나 ‘윈윈게임’이라는 말은 안중에도 없고 근로자는 오직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앓던 이로 보이는 것이다.

한성CC도 그랬다. 경기보조원들은 십 수년간 순한 양처럼 회사를 위해 그린을 누볐고, 골프회원들에게 서비스를 다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자신의 노동 속에서 스스로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일어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회사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것은 이 뽑기 전의 마취에 불과했다. 회사는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경기보조원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기보조원들에게 가스를 살포했다. 합판으로 창문을 막고, 용접으로 대기실 문을 폐쇄하고... 당연히 그곳에 ‘가족’이나 ‘윈윈게임’은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은 상대를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한성CC도 노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게임이 진정한 윈윈게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헌신할 때 가능해진다. 요구와 굴복만이 존재하는 게임은 결코 윈윈게임일 수 없는 것이다.

한성CC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그린의 한쪽편에 노동조합 깃발을 꽂아둔 채 웃음진 얼굴로 골프장을 누비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 우리 모두의 희망일 수는 없을까. **다산**

인권마당

보안관찰 정보 공개 거부는 알권리 침해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씨가 지난해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공개 시 북한의 후색 선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페미니스트 예술행사, 전주 이씨 종친회 급습으로 무산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그룹 ‘입김’이 지난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종묘에서 열려던 ‘종묘 점거 프로젝트’가 전주 이씨 종친회 등 100여명의 급습으로 무산됐다.

입김은 거부장적 왕실문화의 상징인 종묘를 여성의 자궁으로 재구성하는 ‘아방궁(아름답고 방자한 자궁) 종묘점거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나, 행사 첫날 전주 이씨 종친회,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 연합회원 100여명이 몰려와 “신성한 종묘 앞에서 여성해방투구를 만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시작품을 파손하는 등 전시장을 이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행사는 무산됐다.

이 같은 행동은 입장이 어떠한, 분명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2호

2000.10.18(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

경찰 조사받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머리 16바늘 꿰매 경찰의 가혹수사 강한 의혹, 시민단체들 진상규명 요구

살인용의자로 조사받던 외국인노동자 4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와 다산인권센터는 17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살인혐의로 인도네시아 외국인노동자 4명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둑발로 머리를 구타해 16 바늘을 꿰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일 자정 무렵 수원역전 이른바 사창가 골목에서 숨진 잠비아인 살인 용의자로 이라완 등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붙잡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잡지 못해 지난 9일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넘겼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4명은 통역관 없이 조사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둑발로 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역 근처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건현장을 지나가다 한 여자가 "이것들도 잡아"란 목소리와 함께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와 고등동파출소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연행된 뒤 이라완(24)은 파출소내 지하로 끌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이때 경찰이 구둑발로 머리를 차 왼쪽 머리 위 부분이 쇠의자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도 경찰이 수 차례 머리를 발로 짓이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마, 머리 위쪽에 각각 7cm가량 찢어지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라호만(22)도 지하로 끌려가 무차별 구타를 당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위층에서 맞았다고 진술했다. 8일 새벽 남부경찰서로 이송된 뒤 무하만과 라호만은 통역없이 조사 받았고, 이날 저녁 수원 한독병원에 가 체열을 했으며 이때 이라완

(2면에 계속)

● 인권 기사판 ●

□ 여성근로자학교

- 때: 10월26일(제1강)/ 11월21일(제2강) 오후 2~3시
- 장소:안산시 원곡동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3층 강당
- 대상: 노동조합 여성간부, 여성노동 상담원, 실직여성, 실직여성가장
- 강의주제: (1강) 나 평등하게 살기, 우리 자녀 평등하게 키우기, (2강) 여성 3가지 독립 선언
- 문의: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쉽 교육

- 때: 10월20~22일
- 장소: 안양 전진상복지관
- 문의: 안양전진상복지관 김미영 (031-444-2876)

□ 제5회수원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 인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 둘 다 소중히 여기는 분.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영화제 기간: 10.27~29
- 문의: 031-213-2105

(1면에 이어) 은 간호사로부터 간단 한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인 9일 이라완은 통역관 없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저녁 6시경 병원에 다시 가 이라완씨는 머리와 이마를 16바늘 꿰매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마에 1자형 흉터가 있는 경찰관이 폭행했고 병원에 동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들을 접견한 김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머리에 수십 차례 꿰매 상처가 있으며 수감중인 이들 모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체포 당시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통역관도 없이 "니가 죽었지"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측은 사건현장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칼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살인용의자로 연행했고 통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경찰측은 이라완씨가 체포할 당시 자해행위를 해 상처를 입었으며, 뒤늦게 상처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연행한 다음날인 9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와 다산인권센터는 "수원 엠마우스 관계자로부터 조사과정에서 통역인으로 입회한 적이 없고, 이들 중 한 명을 잠깐 면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의혹이 강하며 더구나 통역인도 없었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하고 이를 위해 대책모임을 18일

오후에 갖기로 했다. 한편 여운철 (법무법인 다산)변호사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내용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특정

국내 11개 인권단체, 아셈민간포럼 탈퇴

"아셈회의동안 인권침해 감시할 터"

아셈민간단체포럼에 참가했던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국내 11개 인권단체가 지난10일 탈퇴했다.

이들은 아셈회의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아셈민간단체포럼이 재정적으로 정부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며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아셈민간단체포럼이 아셈회의를 통해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간 회의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간포럼 재정 정부의존 등 시민운동 정당성 훼손에 반발

이들은 특히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당초 민간포럼 개최장소였던 봉은사(아셈회관 맞은편)를 정부의 불허방침에 강력한 저항 없이 포기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운동이 재정과 사업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면서 "특히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간단체포럼에서 정부측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탈퇴한 국내 인권단체들은 오는 19일 오전 '자본의 세계화를 강화하는 아셈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셈회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장갑차 등을 동원해 반세계화 집회를 강경 진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인권감시단을 구성해 집회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구조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정**

아셈 2000 민간포럼 열린다

‘자본의 세계화’ 횡포 맞선 ‘아시아-유럽 시민연대’... 내일까지 건국대 새천년관

자본의 세계화를 강화하는 ASEM회의에 반대하는 아셈 2000 민간포럼이 18, 19일 이틀 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유럽민간포럼(AEPF)이 주도하는 이번 포럼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내 및 해외단체들이 대거 참여, 노동, 농민, 빈곤과 개발, 문화, 여성,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횡포를 고발한다.

이들은 주요 의제로 ‘WTO와 경제적 세계화, 아시아·유럽에서의 인간중심의 평화와 인권, 실업, 아시아·유럽 정부의 책임’ 등을 정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아시아, 유럽 시민연대를 확립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ASEM회의가 열리는 20일을 ‘아셈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행동의 날’로 정하고,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선언문을 낭독한 뒤 올림픽공원에서 잠실종합체육관까지 행진한다.

이밖에도 AEPF는 19일 오후 7시 건국대 대공연장에서 문화행사를 열며 21일에는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이들과 함께 DMZ을 방문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anti-asem.org>)에서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

- 노동분과
 - 다국적 기업과 사회경제권리(10.19, 오후2시, 1306호)
 - 세계화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10.19, 오전9시,1306호)
- 농민분과
 - 세계화와 대응하는 농민의 권리(10.18, 오후1시, 1209호)
- 경제무역분과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10.18, 오후1시, 국제회의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의 대안(10.18, 오후3시, 국제회의실)
- 빈곤과 개발분과
 -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10.18, 오후1시, 1305호)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의 새로

- 운 패러다임 모색(10.18, 오후3시, 1305호)
- 문화분과
 - 용산미군기지를 문화생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10.19, 오전9시, 1305호)
- 여성분과
 - 경제적 세계화가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10.18, 오후 3시, 1109호)
 - 한국, 아시아, 유럽 여성의 인권침해 현황과 공동대응과제(10.18, 오후 3시, 1109호)
- 평화분과
 -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 극대화(10.19, 오전9시, 대공연장)
 -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10.19, 오전11시, 대공연장)
 -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10.19, 오후2시, 대공연장)
- 환경분과
 - 탈핵과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 체계를 위한 아시아·유럽 민중회의(10.18, 오후1시, 대공연장)
 - 아시아·유럽 생명공학 감시현황과 과제(10.18, 오후4시, 14층 로비실)
 -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 극대화(10.19, 오전9시, 대공연장)
- 미디어분과
 - 대안미디어의 새로운 도전(10.19, 오전9시, 1109호)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민주주의(10.19, 오전11시, 1109호)
 - 미디어기업의 독점과 여론독과점 폐해, 언론의 자유(10.19, 오후2시, 1109호)
- 종교분과
 -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10.19, 오전11시, 14층 로비실)
- 자원봉사분과
 - 청소년자원봉사(10.18, 오후5시, 1209호)
 -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10.19, 오후2시, 1209호)
- 청년학생분과
 - 청년의 사회참여(10.18, 오후1시, 1209호)
 - 아시아·유럽 청년학생운동의 연대 및 교류 활성화(10.19, 오전9시, 1209호)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 엿보기”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7일(금)~29일(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인권영화제가 5돌을 맞이했다. 영화제는 다양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section1.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 section2. 세상의 반쪽, 그들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section3.소수자, 그들에게 발언하게 하라. section4. 다만 불편할뿐 자유로운 영혼, section5. 청소년, 나의 인권은 내가 말한다. section6. 아직도 신념은 간혀있다. section7. 분단을 넘은 인간의 자유, section8. 대인지뢰, 치유할 수 없는 전쟁무기등으로 나누어져있다.

작품들은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인권영화제, 서울다큐영상제, 청소년국제영화제, 장애인영화제등에서 상영된 영화들 중 엄선된 작품들이며, 폐막식에는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쟁점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영화는 10월 27일(금)부터 3일 동안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속 상영되며, 장소는 28일(토) 저녁 6시부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야외무대의 상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상영 작품	분류	장소
27일(금)	12:00	12:31	학교 가는 길(31분)	장애인	은하수홀
	12:40	13:22	보이지 않는 창살(42분)	양심수	
	13:35	15:00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85분)	장기수	
	15:20	17:16	인간의 시간(116분)	신자유주의	
	17:30	18:57	하비밀크의 시대(87분)	동성애	
	19:00	19:40	개막식(40분)		
	19:40	21:10	로저와 나(90분)	신자유주의	
	21:20	21:42	노인, 또하나의 시간(22분)	노인	
	21:42	22:02	얼어붙은 교실(20분)	청소년	
	12:00	12:50	명멸하는 불빛(50분)	노동	
13:00	13:55	아웃엔워크(55분)	동성애		
14:05	15:05	먼저 덮인 인형(60분)	여성		
15:15	16:45	지구촌 혹은 악탈촌(90분)	신자유주의		
17:00	17:28	페스트푸드우먼(28분)	여성		
17:40	18:52	제 9법안 찬반투표(72분)	동성애		
19:00	19:07	마우스콘신(7분)	노동		
19:10	20:11	얼어붙은 교실 외 2편(61분)	청소년		
20:20	21: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51분)	장애인		
21:20	22:18	풀은 풀끼리 늪어도 푸르다(58분)	장기수		
29일(일)	12:00	12:47	꼭 한걸음 씩(47분)	노동	은하수홀
	13:00	14:10	두밀리, 새로운 학교(70분)	작은학교살리기	
	14:20	14:47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27분)	대인지뢰	
	15:00	16:30	미래를 위한 투쟁(90분)	신자유주의	
	16:40	17:10	평화란 없다(30분)	여성	
	17:25	18:57	데모크라시에더봄(92분)	이주노동자	
	19:00	19:53	황제의 새옷(53분)	신자유주의	
	20:00	22:00	폐막식-신자유주의에 위협 받는 인권(쟁점토론)		

인권의 눈

청소년의 말 할 권리

최종식 경기일보기자

수업이 끝난 여고생 4명이 신나게 학원으로 가고 있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이야기며 학교 총각선생님 이야기까지 할말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재미있는 수다를 경찰관이 가로 막았다. 바쁘게 걷다가 무심코 무단횡단을 한 것이 적발된 것.

여학생들은 무단횡단을 적발한 경찰관이 조금은 야속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잡지 않고 그냥 보냈던 것. 여학생들은 경찰관에 항의했다. "왜 우리만 잡아요"라고. 그러자 경찰관은 "어린 학생들이 항의한다"며 길가에 30여 분 동안 손을 들고 서있게 한 뒤 순찰차에 태워 학교까지 왔다가 담임이 없자 파출소로 다시 데려갔다. 학생들은 말 한마디하고 1시간 여 동안 창피를 당해야 했다.

지난 10일 시흥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냥 쉽게 넘어 갈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사회의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어쩌면 이 사건처럼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 한마디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야 할까?

최근 두발자유화 문제도 학생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말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두발자유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곧바로 두발자유화 문제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교육부는 두발자유화를 결정할만한 교육철학이 없다는 공문이였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공문이 학교에 도착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마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전국의 학교들은 모두 두발자유화가 이뤄졌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는 물론 가정 사회 모두에서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말로 말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권마당

지난해 국보법 관련 구속자 2백86명

□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이 2백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이들 구속자 중 90% 이상이 국보법 제7조(이적단체 등의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7조3항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될 경우 그 개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베트남전 심포지엄' 참전군인단체 방해로 무산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엄'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단체들의 방해로 무산됐다. 서울시측은 고엽제전우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면서 행사 당일 오전10시에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위원회 일부는 행사를 강행하려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폭력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수원인권영화제 특집호 2000.10.25(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27일~2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세계화에 맞선 인간과 영상의 연대



수원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과 야외무대에서 각각 열린다.

'우리들의 삶과 희망 엿보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신자유주의와 인권, 장애인, 장기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다룬 작품 26편이 상영된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파헤친 작품들과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분노가 담긴 작품들이 대거 상영된다.

신자유주의 주제로 한 쟁점토론 펼쳐
마지막 날인 29일 폐막식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란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갖는다. 차미경 국제민주연대사무처장이 강연을 하며 김철준 변호사가 진행을 맡는다.

개막작

'경영난 내세운 GM사의 대량해고, 파괴되는 삶의 터전'

로저와 나

(27일, 오후 7시40분, 은하수홀)

1989년 미국 플린트시를 배경으로 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작품. 플린트시는 자동차 회사인 GM사가 탄생한 도시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 곳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GM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다. 사람들은 범죄자로 전락하고 도시는 황폐해진다. 감독은 GM사의 회장인 로저 스미스를 플린트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펼친다.

Table with columns: 날짜, 상영시간, 상영작품, 본 표, 장소. It lists film screenings for October 27, 28, and 29, including titles like '학교 가는 길', '보이지 않는 창살', and '로저와 나'.

section 1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

개막작인 '로저와 나'를 비롯해 '인간의 시간'(27일), '지구촌 혹은 약탈촌'(28일), '미래를 위한 투쟁'(29일), '황제의 새 옷'(29일) 등 모두 9편이 상영된다.

황제의 새 옷

(감독: 마그누스 아이작슨, 캐나다, 95년작)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겠다며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실업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몇 안 되는 일자리를 얻은 멕시코인들은 노예처럼 살아간다. 자본의 논리만을 내세운 세계화를 벌거 벗은 임금근에 비유하면서 이에 맞서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인간의 시간

(노동자뉴스제작단/현대중기산업노조, 2000년작) IMF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1998년, 정부의 퇴출 발표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린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 현대건설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50일동안 투쟁에 나섰다. 그 고단한 시간을 그들은 '인간의 시간'이란 이름으로 차분히 기록해 나갔다.

section 2

세상의 반쪽, 그들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

'먼저 덮인 인형'(28일) '페스트푸드 우먼'(28일) '평화란 없다'(29일) 등 모두 3편이 상영된다.

먼저 덮인 인형

(아시아여성위원회/독립영화단체'외양', 태국) 93년 태국 완공장에서 불이 나 18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 소녀였다.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결혼 시 퇴사한다는 고용계약서를 써야 하는 스리랑카 여성 노동자들, 해고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한국 여성노동자들. 자본의 세계화와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태국, 스리랑카,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그렸다.

평화란 없다

(감독: 윤은정, 한국) 이 사회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정에서 슈퍼우먼이 되라고 강요한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칼날은 항상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세상의 반쪽, 이 땅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평등의 심화와 비정규직으로의 확산, 그로 인한 고통. 과연 대안은 있는가?

section 3

소수자, 그들에게 발언하게 하라

동성애자, 노인, 난민 등 소수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비밀크의 시대'(27일) '제9법안 찬반투표'(28일) '데모크라시 예더봉'(29일) 등 모두 5편이 상영된다

제9법안 찬반투표

(감독: 해더 맥도날드, 미국) 92년 오리건주에서 치러진 반동성애 법안(제9법안) 찬반 투표를 앞두고,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이며 변태라고 선전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를 감행한다. 콜로라도주

에선 반동성애 폭력 사건이 275%나 증가했다. 단순한 동성애자 옹호라기 보다는 세상의 비합리와 눈먼 증오를 증언하고 있다.

데모크라시 예더봉

(감독: 박두병, 김이찬, 한국) 미얀마 NLD 한국지부 사람들은 99년 9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만 난민의 지위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낯선 이국 땅, 한국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section 4

다만 불편할 뿐 자유로운 영혼

학교 가는 길 (푸른영상 제작)

제1회 장애인영화제 상영작으로 정신 지체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필름에 담았다.

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

(감독: 정해상, 한국) 28세의 오상훈씨는 손발을 못쓰는 중증 장애인이다. 33세의 한민수씨는 평생 목발에 의지해 온 소아마비 장애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런 도전자'들이다. 신체의 장애 속에 숨어있지 않고 세상의 편견에 과감히 도전하는 장애인스포츠 선수들. 비록 그들의 투혼을 성원해 주는 함성은 없지만, 그들은 불굴의 정신과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자들이다.

(제4회 서울국제다큐멘터리영상제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section 5

청소년, 나의 인권은 내가 말한다

'얼어붙은 교실' '교실이테아' '울은 개소리' 등 세 편이 28일 야외무대에서 선보인다.

얼어붙은 교실 (감독: 김길환, 한국)

한 고2 교실, 개학을 맞은 이 교실의 어디에도 새 학년에 대한 설렘과 새 친구들에 대한 기대는 없다. 오히려 지루한 학교생활에 어떤 애를 '밥'으로 부릴까, 하는 탐색전이 시작될 뿐이다. '빼따선' 타는 재호의 레이더에 몸집도 작고 말도 없는 준형이 잡힌다. 빵 심부름, 담배 숨기기까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준형은 어느 날 재호의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집단구타를 당한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형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준형의 자살을 접한 재호는 '준형이 XX 그래도 고자질은 안 하고 죽었네' 라는 끔찍한 말을 내뱉고, 선생은 학교 이미지상 안 좋으니까 입조심하라는 명령을 아이들에게 내린다. 아이들은 교실바닥에 떨어진 준형의 반지를 줍지만 이들에게 이 반지가 금이나, 아니냐가 더 궁금할 뿐. 그들은 싸구려 반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section 6

아직도 신념은 갇혀있다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수치를 가늠해본다. 절반의 생각과 양심을 강요하는 법 제도는 여전히 견고하게 우리를 가두고 있다. 이번 영

화제에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창살

(남택진, 한국, 1999년작) 조계사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구정권 시절의 정치수배자들의 수배가 풀린다고 해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까. 아직도 냉전이테올로기에 갇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술퍼렇게 유지되는 한 이 땅에서 정치수배자나 양심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를 넘겨가며 조계사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의 조계사 농성단, 제3의 조계사 농성단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더 이상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지 않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section 7

분단을 넘어 인간의 자유

분단은 상처를 덧내고 한(恨)을 토해냈다.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써야만 했다. 우리는 '결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비장하게 말하고 있다.

풀은 풀거리 늪에도 푸르다

(김태일, 한국, 1996년) 길게는 45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출소해 낙성대에 살고 있는 6명의 장기수부들의 고단한 삶을 앵글로 잡았다. 현재 이 분들 중에는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 곁으로 간 이들도 있고,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있다.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김태일, 한국, 1995년) 93년 3월 초 봄비가 내리는 대전교도소 앞. 26년 간 복역한 후 석방된 장기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다. 세월은 두 사람을 할아버지와 장년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만남은 아주 담담하고 짧았다. 감독은 출소한 장기수들의 곁을 좇으면서 필름에 담았고 그들의 동지들이 죽어간 지리산, 회문산, 여분산, 백운산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section 8

대인지뢰, 치유할 수 없는 살인무기

대인지뢰는 대량학살을 야기하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전쟁무기였다. 전쟁이 끝났다 해서 대인지뢰의 공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의 잔혹성을 파헤쳐 본다.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페르난도 트루에바 외, 프랑스, 1997년) 프랑스의 국제적 장애인 단체인 헨디캡인터네셔널과 베르트랑 타베르니에의 영화를 주로 제작한 리틀베어가 대인지뢰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든 10편의 단편 영화.

대인지뢰는 전 세계 60여 나라에 1억 1천만 개 가량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상자는 연간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도 약 백만 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가 합법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핑계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인권을 신장하는 길임에 분명하다.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3호
2000.11.1.(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s@hanmail.net

고문의혹 파출소 지하실 확인

외국인노동자 고문수사진상위 현장조사

수원외국인노동자 고문수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김칠준변호사)는 31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외국인노동자가 고문 장소로 지목했던 고등동파출소 지하실의 존재와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이라완 등 살인용의자로 붙잡힌 외국인노동자 4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파출소를 방문,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 끝에 지하실의 구조와 식당, 서고를 확인한 것이다.

그 동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라완은 진상조사위원인 여운철변호사와 접견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로 연행된 뒤 지하실로 끌려가 꿰어앉은 채 경찰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마와 머리가 각각 7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하실의 내부 구조와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라호만도 지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또 다른 명은 1층에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수원고등동파출소 부소장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는 1층에서만 한다"고 말했고 수원남부서 형사계장과

2반장은 "이들을 1층에서만 대기시켰을 뿐 다른 곳으로 데려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었으며 자해행위로 다쳤다"고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말했다.

이날 현장조사를 벌인 여운철변호사는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이라완은 파출소 지하실의 존재와 구조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라완이 지하실의 존재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파출

소에 연행되었을 때 지하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된다"며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정황증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일 이라완 등에 대한 가혹수사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문, 신체 검증 및 감정을 할 예정이다.

다산

가평 농장서 이주노동자부부 강제노역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가 가평군 한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이 지난 10월5일 가평 청평농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스리랑카 국적의 이들 부부를 데려오면서 확인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부터 이 농장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둘이 합쳐 한 달에 130만원을 받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못 견디고 8월 퇴사를 요청했으나, 농장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그만 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 9월29일 대체인력을 구한 뒤 농장을 나오려 했으나 농장주가 새로 들어온 2명이 그만두려 한다면 자신들의 퇴사를 막고 임금 120만원을 빼앗은 채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는 지역 경찰관을 데려와 "일 안하고 가면 강제출국시킬 것이다"고 위협했고, 이 때 경찰관은 수갑까지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다산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 주제로 수원인권영화제 쟁점토론 열려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마지막 날인 29일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란 주제의 강연이 마련됐다.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시대 인권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지에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풀어갔다. 특히 이날 강연은 차국장이 김칠준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이사이 방청객들이 질문도 하는 텔레비전 시사토론방식으로 진행되어 이채를 띠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인권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세금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사회복지예산도 줄이라고 요구한다. 인간을 하나의 생산 도구로 보고 경쟁력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박탈한다. 그 결과 유럽에선 "신자유주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덧씌우는 유령"이라고 말한다.

-중산층들은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0%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들 중 10%만이 일자리를 얻는다. 나머지 60%를 실업자로 만듦으로써 중산층을 붕괴시킨다. 세계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다국적 기업 맥도널드의 경우 질 나쁜 고기를 제공하고, 매장에도 소비자들이 인체 공학적으로 30분 이상 앉아 있기 힘든 불편한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남녀노소, 노동자와 소비자,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신자유주의나 다국적기업의 피해자가 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디즈니사의 완구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공장에서 불이나 100여명이 죽었다. 작업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피해가 더 커졌다. 태국, 홍콩 주부들은 "노동자의 피가 배어 있는 완구는 사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벌임으로써 노동자와 연대했다. 디즈니사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인권단체들은 이 기업에게 인권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지난번 시드니올림픽 때 노동, 인권, 소비자단체들이 중심이 돼 이윤착취에 반대하는 대안올림픽을 열었다. 이들은 제3세계에서 신발 한 켤레 값의 0.2%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며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나이키사에 반대하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협찬을 받은 올림픽을 반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대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 원칙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체들은 막연히 그러한 현실을 인정할 뿐 국제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원칙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의 국경을 넘은 연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대중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인권운동은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더 이상 골방에서 인권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교회, 성당, 학교 그 어디든 인권 교육 매뉴얼을 갖고 들어가야 한다.

인권게시판

- 수원여성의전화 6주년, 성폭력상담소 5주년, 가정폭력상담소 1주년 기념식
 - 때: 11월1일 오후2시~5시
 - 곳: 수원여성의 전화 교육실(031-232-7780)
- 일본 시민운동가와의 만남
 - 때: 11월2일 오후 3시 · 곳: 수원여성회
 - 내용: 소우지 일본시민운동가를 통한 일본시 민운동의 현황(031-241-7530)
- 제1차 통일포럼
 - 때: 11월10일 오후7시 · 곳: 수원YMCA 강당
 - 강사: 이종석 세종연구소책임연구원
 - 문의: 031-215-6673

인권의 눈

우리가 이 여성을 죽였다

한옥자 / 수원여성회 대표

지난 9월 중순 경 군산에서는 꽃다운 나이의 여성 5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 여성들은 대학생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공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여성도 아닌 필요할 때는 찾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윤락여성들이었다. 부모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 여성들은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철창이 쳐진 2층 방에 갇혀서 찾아오는 남성들의 정액받이 노릇을 하며 포주의 주머니를 채워주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매춘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한 단체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향락업소 종사자가 120만 명 가량이 있는데 이 수치는 20대 여성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웃음과 몸을 팔며 생활을 이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산물로 더욱 공고화된 성의 상품화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격을 더 한층 떨어뜨리고 있다. 요즈음 한창 문제가 되는 러브호텔, 원조 교제, 미성년자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되어서 인간은 인간 이하로 취급되고 죽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매여있는 동물과 다른 것은 자유의지와 생각일진데 그 날, 그곳에서 숨진 여성들에게 인간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제공되었는지 묻고 싶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부러워한 일기장 대목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케 한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고 이끌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군산 쉬파리 골목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저항할 힘도 없이 오로지 동물과 다름없는 생활에 포주의 배를 불러주고 성욕에 허기진 인간들을 채워주다가 그렇게 떠나간 것이다. 오늘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여성들이 제2의 쉬파리 골목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죽어 가고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삶 속에 스며든 인권연대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성황리에 막 내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6편이 상영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학생 단체관람 등 모두 500여명이 다녀갔다. 또 29일에는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영화제의 의미를 한껏 높였다.

올해는 특히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들이 대거 선보였다. 개막작인 '로저와 나'는 GM사가 경영난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도 재밌게 그려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또 수원 창현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은 28일 켄 로치 감독의

작품 '명멸하는 불빛'을 관람,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날 상영된 미얀마 NLD한국지부 사람들의 민주화 투쟁 이야기를 담은 '데모크라시 예터봉'(민주봉기)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관객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삶에 한동안 숙연해졌다. 영화를 관람한 수원 밀알교회와 한민교회는 1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종교개혁주일헌금을 후원금으로 NLD 한국지부에 보냈다. **다산**

☞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031-213-2105

☞ **열린다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2000. 11. 13. (월)

<http://www.rights.or.kr>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 humandasan@hanmail.net

제4호

2000. 11. 15. (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고문수사 입증할 충분한 근거 있다”

진상조사위, 고문장소 등 피해자 진술과 일치 지적...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수원의국인노동자 고문수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칠준변호사)는 이라완 등 외국인노동자 4명에 대한 경찰의 고문수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보름간의 진상조사 끝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완이 고문장소로 지목하며 상세하게 진술한 고등동파출소 지하실의 존재 및 구조가 실제 파출소 지하 내부와 일치한다는 점 ▲게다가 경찰이 이들을 지하실로 데려간 적이 없다고 밝힌 점 ▲상처 부위와 깊이정도가(이라완의 머리와 이마가 각각 7cm 가량 찢어졌음) 자해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 ▲경찰이 자해했다고 주장하는 벽, 책상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경찰이 취재기자들에게 진술하면서 내용을 계속 반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고문수사의 의혹을 더 한층 높여준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수사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통역인이 제대로 제공

되지 않았고, 부상을 당한 지 무려 40시간이 지나서 이라완에게 의료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불공정한 수사이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고문수사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라완의 소송대리인인 여운철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15일 경찰의 고문수사로 부상을 입은 이라완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변호사는 “경찰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무리

하게 자백을 강요하는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드러난 만큼 국가는 이라완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완 등 외국인노동자 4명 중 고문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라완과 라흐만이 기자회견 3일 뒤인 지난 11일 오후 강제출국 당했다. 나머지 두명도 곧이어 출국 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 측은 감비아인 살인용 의자로 유력한 다른 외국인노동자 2명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 인권계시판 ●

□ 일하는 여성을 위한 특강

- 때: 11월21일 오후 6시30분 · 장소: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3층 강당
- 내용: '여성, 3가지 독립선언'을 주제로 한 오숙희씨의 강연 (031-495-6844)

□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 어울마당

- 때: 11월19일 오후 1~5시 · 장소: 수원공업고등학교 운동장

□ 수원의국인노동자쉼터 소식지 발행

지난 7월31일 문을 연 수원의국인노동자쉼터가 격주로 소식지를 발행한다. 4면으로 지난 11월 첫 호를 낸 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인권지기로 소식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031-228-2789)

□ 2000회년 한마당

- 11월19일 오후 12시~5시 · 장소: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02-747-4130) · 내용: 매항리 관련 서명운동과 전시, 설치미술 전시

인권단상

죽은 자의 인권

최근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수원교도소와 성동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지상과 박순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수원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이지상은 지난 99년 4월6일 부모에게 "아직 살아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는 편지를 쓴 후 교도소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들은 이미 상급자들에 의한 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망인도 이전에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상급자들이 하급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일차례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급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8년 2월 4일, 7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박순종은 가족들도 모르게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18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이 비록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죽을 병은 아니었다며 구치소 내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등 구금시설에서 의문사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

이 진상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고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는 것은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진상을 덮는데 급급하고 수사기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유족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지상의 아버지는 아들의 동료대원을 만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듣고 기록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박순종의 아내는 같은 방에 수감됐던 사람으로부터 감방장과 함께 망인을 구타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은 후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데도 법원은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의 노력을 일축해 버린 것이다.

흔히들 억울한 죽음은 원혼이 되어 허공에 떠한다고 말한다.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때 억울한 죽음이라 한다. 허공에 떠도는 원혼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원권'일 것이다. 그래서 신원권이 죽은 자의 가장 소중한 인권임을 인식하고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산 자의 당연한 책임이다. 오늘 법조타운의 밤하늘에는 '신원권'을 외치는 원혼들의 울부짖음이 유난히도 크게 들린다. **다산**

한국군 민간인 학살 입증 미국 기밀자료 공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고 이에 대해 군 및 정보기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지난 6월 기밀해제된 것. 위원회는 수십 건이 제기됐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중 68년 2월12일 쿠양남성 디엔반현 풍니마을 학살, 10월22일 쿠양남성 쑤지엔현 홍차우마을 학살, 69년 4월15일 쿠양남성 디엔반

현 폭미마을 학살 등 3건의 학살의혹 사건과 사진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9명이 희생된 풍니마을 학살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에서도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산**

인권의 눈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호졸'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고길섭 / 월간문화연대 편집실장

엣그제 서울시 관악구의 '민방위대원(?)'으로서 보라매공원 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장 입구로 들어가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자그마한 풍경이 나의 시선을 자극시켰다. '자그마한 풍경'이긴 해도 그것은 일련의 규율체계를 습속화하는 풍경들인지라 나의 눈동자가 차꾸 반발을 일으켰다. 이십여 명씩 줄을 세우고 집단화하여 교육장 안으로 구청직원이 인솔하는데, 딱딱한 나무의자가 놓인 자리까지 일일이 지정하며 굴비 윗두리를 차곡차곡 앉혔다. 맨 뒷자리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식의 편하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의례였던 셈이다. 그런 풍경을 보고, 아니 내가 그 풍경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민방위교육이 왜 필요한가, 라는 동어 반복적인 생각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대개 교육은 경제나 안보 등과 관련된 소위 정신교육, 구청장의 국정 및 구청 홍보 발언, 안전사고 방지교육 등이 고작이다. 안전사고 교육 외에는 전혀 쓸데없는, 이데올로기교육이다. 수백 명의 '대원'들은 꾸어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무뚝뚝하게 앉아서 오로지 시간 때우기만을 기다린다. 같은 지역민들이라 해도 전혀 생소한 사람들과의 아무런 친밀감도 유대감도 대화도 없는 침묵의 무관심 그 자체이다. 예비군훈련장에는 그놈의 '예비군복' 때문에 그래도 일탈의 재미라도 나온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은 그런 재미마저도 없다.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민방위교육은 군대-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대한 국가주의적 관리와 규율의 장치라는 것이.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 국가의 육체적-이데올로기적 호졸을 당연시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저항해야 할 우리의 권리다. 시간의 권리, 혹은 시간의 정치. 우리는 국가에 대해 그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이따구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1년 차라는 어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구청장에게 요구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강사들 불러오지 말고, 차라리 관악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령 자동차 정비공이나 노점상인을 모셔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해라. 말씀씨는 없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것이다." 이걸 아마 최초의 저항이다. 수백명의 '민방위대원'들이 큰 박수로 동감을 표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풍경이 아닐까.

인권마당

"알몸수색 손해배상하라"

시위교사 또 알몸수색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1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엔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알몸수색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엇보다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옷을 벗은 채 수색을 받았으며 한강택 서울 중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3일 서울지검에 고소. 이들은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옷을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낙타아저씨들 조직노동자의 대열에

건설운송노조, 12월3일 설립보고대회 갖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

건설산업의 지렛대이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레미콘운송기사(낙타아저씨들)등 건설운송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12월3일 오후 2시 중앙대 대학극장에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사측의 탄압으로 조합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이날 대회는 건설운송노조의 설립을 당당하게 알림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는 당찬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그동안 건설운송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사측의 차량불하로 근로자성을 거세당한 채 법률에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에다 노예 문서와도 같은 '도급계약서'에 얽매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특히 요즘 건설업계의 퇴출바람으로 건설운송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맞이를 해야 한다는 압감 앞에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운송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인권을 찾겠다고 나선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비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완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당분간 분회와 지부를 설립하는 등 내부 체계를 정비한 뒤 단협 교섭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이들, 노동3권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다. [14]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 인권 게시판 ◆

- 흥부 마누라의 호주 승계 확률은?**
· 때: 11월30일 오후 7~9시 · 곳: 수원방송대학교 402호 연구실 · 주최: 수원 YWCA(031-252-5111)
- 민주노동당 수원·오산화성지부 수원지역사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때: 11월30일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동당수원오산화성지부 사무실(031-232-2729)
- 에바다 일일주점**
· 때: 12월1일 오후 5시 · 곳: 평택 시내 비전플라자 8층(031-658-4847)
- 부모,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실 인형극 '하늘이의 비밀'**
· 때: 12월8일 오전 10시30분 · 곳: 안산 여성회관 · 문의: 안산여성노동자회(031-495-6844)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때: 12월9일 오후 6시 · 곳: 장충체육관 · 주최: 민가협(02-763-2606)

일방적 희생 강요에 다시 일어난 노동계

노동계,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악 저지 공동투쟁 나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왜곡된 개혁에 맞서 노동자들이 겨울 별판으로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의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6일 공공부문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제2의 실업자 대란을 몰고 올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9일 파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기로 했으며 양 노총의 공공부문노조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도 30일 '공동행동의 날' 대회를 열어 부분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또 전국대학노조는 오는 12월1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 '사학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대학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도 12월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근기법 개악저지 전국사무금융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노동계가 공동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경제희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 양 노총은 구조조정 및 노동시간 단축, 노조 상근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단협 실효성 확보, 비공직자 비리와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정규직 보호 등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환멸을 느끼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4]

인권 단상

에바다의 희망을 접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열어가려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에 걸 맞는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을 희망하고 있다.

에바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희망 만들기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다. 11월 27일은 바로 에바다 농아원의 원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폭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치부를 송두리째 드러낸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시설 운영자의 공금 횡령이 밝혀졌고 후원자들이 낸 각종 후원금도 행방이 묘연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작업장에서의 임금착취, 미군에 의한 성폭행, 농아들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났다.

그 사이 4년 간의 지루한 싸움이 진행됐다. 처음에는 복지시설에서의 비리척결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장애인들의 인권운동으로 발전했으며, 결국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운동으로 귀결됐다. 그것은 시설이 설립자의 사유물로 전락하거나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바다 싸움은 복귀를 시도하는 구 재단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대책기구사이의 고집스런 힘 겨루기로 왜곡됐다. 에바다 사태에 책임이 큰 평택시는 본질적인 해결을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면서 공정한 중재자행세를 하고 있다. 구조적인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고, 설립자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잦아드는 틈을 타 기득권을 주장하며 슬그머니 복귀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에바다는 인권복지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에바다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접어 버리겠느냐고. [14]

인권의 눈

차 우선 정책에 밀려난 보행권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오늘 아침,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대개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익숙지 않은 중앙분리대를 보게 됐다. 세무대학 근처의 삼익아파트 앞 6차선 큰 도로 중앙에 전에 보던 노란 중앙선 대신 견고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철책 분리대가 딱 하니 박혀있는 것이었다.

이곳 중앙분리시설물은 차의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한 차단벽이다. 원래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다. 그런데 약간 경사가 진 이곳을 과속으로 내달리던 차들이 왕왕 사고를 내곤 하였다. 그러자 수원시에서는 선뜻 이곳에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지하도를 내고, 사람들에게 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지상으로 당당히 건너던 시민들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다가,

대낮에도 형광등 불빛으로 길을 밝힌 지하폐쇄통로를 따라 걷고, 다시 웅색한 계단을 올라가야만 길을 건널 수 있는 지하보도 이용을 불편해 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선도 없어진 이 넓은 도로를 눈치껏 가로질러 건너다녔다.

이렇게 용감(?)한 시민들은 무단횡단 범법자가 되었고,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은 무단횡단 보행자 탓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많은 돈을 들여 애매한 시민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든 꼴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중에서는 이러한 식견 없는 수원시 교통행정을 따져들었고,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골치가 아프게 된 수원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민들을 지하보도로 몰아 넣어야만 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을 막는 철용성 중앙차단벽을 차도에 설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웃지 못 할 이야기다.

그런데 일년에 단 열 명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수십 개의 형광등을 켜놓고 있는 수억원짜리 지하보도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정자동 동신APT와 정자동초등학교 앞 네거리에도 벌써 3~4년 전 설치됐다. 그곳 정자동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파장동 삼익아파트 앞 지하보도 건설 검토 시에 어떠한 교훈도 되지 못하였는가 보다.

이 도시의 주인은 사람이다. 차량이 이 도시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 차량 위주의 도로 교통행정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교통 약자인 보행자가 최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상쾌해야 할 아침 출근길마다 도로 한 가운데의 저 흉칙한 철 구조물을 마주치면서 느끼는 이 씁쓸함. 휴먼도시, '하하수원'의 실상을 깨닫는다.

인권마당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돼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7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자살하는 것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모씨가 97년 2월 폴란드 출장간 뒤 약 4개월 간 평일에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일으켜 3층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장모씨가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된다

▶인권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인권피해치료센터'가 건립된다.

추진준비위원회(공동대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인권 회복은 물론 생명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5·18 부상자 가운데 2백15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생존자의 60% 이상이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신고된 피해자가 9천여 명, 고문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이들도 4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6호

2000.12.13.(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흑한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용인 한성CC 경기보조원 208명, 부당해고 반발 134일째 천막농성

겨울이 춥지만 올 겨울 유난히 더 추운 사람들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빼앗긴 이들, 자본과 권력에 밀려난 이들, 그들에게 더 없이 혹독한 겨울이다. 그들의 겨울나기를 시리스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영하 6도의 한파가 몰아닥친 12일 아침, 용인시 구성면에 있는 한성CC 앞 천막농성장.

간 밤 추위에 언 몸 녹이라,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갈 준비하라 아침부터 바쁘다. 오늘로 농성 134일째. 한 여름 피약벌 속에 거리로 나온 이곳 경기보조원들은 고단한 싸움하느라 시간도 잊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고 칼바람 이는 겨울 한복판에 서 있다.

천막 안에 달리 난방시설이 있을 만무. 그나마 있는 전기난로는 화재의 위험에다 머리도 아파 잘 때는 끈다. 전기장판에 의지하지만 정작 추위를 이겨내는 힘은 함께 천막을 지키고 있고 10여명의 동료들.

지난 8월30일 사측은 한성CC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계속 미루다 갑자기 무기한 휴장을 선언했고 경기보조원 208명 전

원을 해고했다. 곧이어 지난 9월8일 'No 캐디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은 거리로 나섰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수원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사측은 기피신청을 내며 첫 번째 지노위 심판회의를 연기했고 일주일 뒤 차명문제를 제기

하며 또다시 미뤘다. 지난 5일부터 23명에 대한 차명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나 이 역시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노위 앞에서 수원지역노동자연합품물패 '연풍대'와 함께 "우리도 엄연한 노동자"라며 집회를 하는 경기보조원들. 분노의 목소리는 흑한으로 갈라졌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1식]

건설운송 노동자 한 깃발아래 모였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지난 3일 오후 2시 중앙대 대학극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설립보고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사측의 부당한 요구나 관행을 따라야 했던 이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노조 깃발을 앞세워 힘차게 들어섰다. 특히 이날 재능교사노조 소속 '민들레'가 함께 해 건설운송노조의 출범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날 장 위원장은 "그 동안 건설운송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측의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운반 도급비의 정상화 등 건설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권익 확보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운송기사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온 김철준변호사도 축사를 통해 "오늘의 노조건설은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의 결과"라면서 "이제 노조를 통해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의 빼앗긴 노동인권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건설비리를 척결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식]

학교폭력 방관자 심판대에 세운다

오는 17일 '2000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모의재판 열기로

왕따와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이 심판대에 오른다.

수원청소년네트워크는 17일 오후 2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꿈의 체육관에서 열리는 2000 청소년동아리 한마당에서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을 법정에서 세운다.

이날 고등학생들은 모의재판을 열고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왕따 문제를 방관자의 시각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피고인은 왕따식군이 강주먹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지켜보기만 했던 김방관. 검사는 "같은 반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맞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의 현장에서 팔짱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독버섯처럼 번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검사는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와 양심이 명하는 청소년의 법"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1년 간 학교폭력의 파수꾼이 될 것」을 구형한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피고인도 자신이 왕따 당할 것을 두려워해 만류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학교폭력을 방지한 책임은 학교, 정부, 학부모 등 어른들에게 있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과연 피고인은 무죄인가. 이날 재판에서는 학생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유죄여부를 평결한다.

학생 배심원들은 학교폭력을 방관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귀추가 주목된다. **■**

일본군 '성노예 전범' 단죄

국제법정, 히로히토 전 일왕 등 8명 유죄판결

12일 일본 도쿄 구민회관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은 일본군이 전쟁 중 저질렀던 성범죄와 관련해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 범죄행위자로 기소된 히로히토 전 일왕을 비롯해 8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아시아 9개국 75명의 증언자들과 일본군 출신 가해자 2명의 증언을 통해 이뤄진 것. 수석판사 맥도날드는 "2000국제법정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에 있다"며 "그 정의는 후세와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 열린 이번 법정은 민간법정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날 남북 공동기소에 이어 중국과 동티모르 등 7개국 피해자들이 함께 일본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13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동티모르 피해자가 증언에 나서 동티모르에서의 일본 만행이 최초로 공개됐다. 그러나 일본 대다수 언론은 이 법정을 외면했다. **■**

인권마당

"국보법 폐지하라"

19개 인권단체 성명서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국내 19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기념해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

이들은 "국보법 7조3항의 존속,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서 연내 국가위원회 설치법 제정 및 국보법을 폐지할 것,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 중지 및 생존권 보장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

올해 최대 인권뉴스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

인권하루소식은 올해 최대 인권뉴스로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선정.

또 올해의 인권지킴이로 매항리 주민대책위가, 올해의 인권침해자로 주한미군과 미국정부, 국회의원 정형근, 롯데호텔 파업 때 무력진압을 한 이무영경찰청장이 뽑혀.

미국 170만개 대인지리 "70%가량 한국에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미국이 170만개의 대인지리를 외국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량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인권의 눈

해고도 서러운데 '왕따'까지

손경미 노무사

학생들 사이에 '왕따'문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꽤 오래됐다.

그런데 사측에서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는 방법으로 왕따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부당 해고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눈에 띈다.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면서 궁색한 변론으로 일관하던 회사가 마지막 히든카드처럼 끄집어내는 서류. 그것은 바로 해고된 노동자의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아온 연명서이다. 내용은 대개 "이 사람과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다", "해고된 이의 복직을 절대 반대한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봐라, 오죽하면 동료들이 이러겠느냐, 그러니 내가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큰소리친다.

회사측이 행한 징계조치가 정당한 지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애꿎은 주위동료들을 부추겨 해고된 이를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아무리 해고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처럼 인간적인 모멸까지 주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조직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척 당하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물론 동료에 대한 서운함,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해고됐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괴로워할 당사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해고를 핑계 대며 왕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사측의 이 같은 비열한 행위는 남아있는 이들에게 살벌한 생존 근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공동체 문화를 파괴할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왜 왕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가. 아이들 사이에서의 왕따문화는 그들만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어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문화가 이식돼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경쟁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서 '사람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회사는 더 이상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기심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한사람을 파멸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개선 한목소리 낸다

민변 민교협 인권단체, 국보법 폐지 철야농성 돌입

국내 인권단체들과 변호사, 교수, 국회의원 등이 개혁 입법 등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와 국

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등)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권한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

구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이창복의원, 이미경의원, 한나라당 김원홍의원, 김영춘의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한편 민변, 민교협 소속 변호사 및 교수 100여명은 14일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국내 인권단체들도 13일 오후부터 인권개선 실천 조치를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호외

2000. 12. 18. (월)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국보법 폐지 · 국가인권위법 제정하라”

인권단체들, 18~23일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돌입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국내 19개 인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는 23일까지 6일 동안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두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4분5열 되어 있고, 대통령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보법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면서 “올해 인권 2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물 건너 가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7조3항(이적단체 가입, 구성)을 존속한 채로 국보법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은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인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인권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권 2대 현안의 연내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성단은 단식농성동안 거리 홍보와 촛불시위를 함께 벌이며 21일에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총 결집해 집회를 갖는다.

국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및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는 기자회견과 함께 캠페인 및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민변과 민교협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14일까지 철야농성을 했다. 민주화 원로 15명도 13일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를 암흑 세상에 가두는 벽이었다”

고 전제한 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국 국보법은 없어져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여야의원 95명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 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의원입법으로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 두 인권현안은 우리나라 인권 증진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산**

□ 참가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끝>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7호
2000. 12. 27. (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205호 ☎ 031-213-2105 Fax 031-212-1006 e-mail :humandasan@hanmail.net

노조가입 이유로 내쫓기는 낙타아저씨들

계약해지, 부당전출, 심지어 식비 중단까지...레미콘회사 곳곳서 노조탄압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삼표레미콘 풍납공장 노조 사무실. 70여 명이 냉방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9월22일 발족된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선교 분회장을 포함해 7명을 부당 전출하고 공장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한 회사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었다. 겨울답게 바람은 매웠다. 그런데 이들은 냉골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회사측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이번에 회사측에서 부당 전출한 이들은 한 분회장을 비롯해 모두 노조원들로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이곳에서 일해왔다. 지난 11월18일 노조가 건설된 이후 사측은 하루에도 서너 차례 한 분회장을 불러 노조에 낸 가입원서를 빼오라고 종용했다. 그러다 지난 8일 사측은 이들에게 천안, 여주, 일산 등의 지역으로 전출명령하는 내용증명서를 보

내왔다. 이날 풍납 분회는 노조 임시총회를 열고 분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분회 현판식 및 깃발을 걸었다. 그런데 이들 뒤 현판과 깃발을 도난당했다. 한분회장은 “사측은 시장여건 약화 및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감차를 이유로 7명을 전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한번도 시장여건 약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전출지역은 물량이 감소하는 곳으로

인권을 보내며 인권 앞에서 우리는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올해 초 희망과 설렘으로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해하던 세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권운동가들도 소망했습니다. 이전 세기는 야만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권과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벌써부터 왜 이리도 힘겨운 것일까요?

이제 겨우 1년이 지나고 한 세기가 지나려면 아직도 99년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삶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공존과 연대의식이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 세대가 현존하는 시대를 넘어 우리 후손까지 이어질 희망 찾기에 주저하고 망설일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산인권'과 '다산인권센터'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인권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달려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운동이 더욱 그 빛을 발하듯 춥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처음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온기를 느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차할 이유가 없다"면서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밤 9시경 부천 레미콘 이순 분회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폭력하게 들어차 있다. 토요일 밤인데도 이들이 집에 안 가고 모여 있는 이유는 회사측의 노조 탄압 때문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결성되면서 그동안 지급해 오던 식사보조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중단했다. 사측은 또 일방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노조 인정은 커녕 노조원들을 해고하겠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먹는 것 같고 장난치지 말라" "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며 성난 목소리로 사측을 향해 외쳤다.

레미콘기사 노동법상 근로자 명백

파주 미화분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사측은 지난 11월29일 노조 설립 이유로 김봉현 분회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원들은 회사측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속적인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말이 사장이지 법적인 최저 임금만도 못한 박봉을 받으며 살아온 레미콘운송기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찾겠다며 지난 9월22일 노조를 설립했다. 건설운송노조가 출범한 지 석 달. 그사이 레미콘회사들은 운송기사들의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해도 파주 미화분회, 부천 이순·유진분회, 풍납 삼표분회, 진성 부천·안양분회 등 6~7개. 레미콘회사들은 계약해지,

부당 전출, 식비·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단체교섭에 응하기는커녕 레미콘운송기사들의 노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레미콘협회측이 레미콘 노조 신고필증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 성진분회건과 관련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로부터 출, 퇴근 등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노조를 설립,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계약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항의공문 발송, 집회 등으로 맞서고 있다. 건설운송노조는 27일 오후 3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앞에서 노조 탄압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레미콘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

노예문서와 같은 도급계약서에 묶여 실질적으로는 노가다 인생을 살아온 레미콘운송기사들.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꼬투리를 잡아 계약해지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측에 "더는 짓밟지 말라"며 성난 얼굴로 맞서고 있다. **다산**

다산인권센터 주소가 1월2일로 바뀝니다.
수원시 팔달구 원전동 81-6
법전빌딩 313호

◆인권마당◆

국보법 구속 최형규 1월5일 첫 공판

지난 11월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최형규(한신대 신학과 93학번)에 대한 첫 공판이 1월5일 오후 1시30분 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군 복무 중인 최씨는 처음에 군사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후 불법 출판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 위반으로 지난 9일 기소됐다.

한편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손일식, 노용환, 김지목씨는 지난 14일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출범

그동안 두발자유화 운동과 고교등급화 반대 운동을 펼쳐온 전국 중고등학생들은 지난 23일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을 발족하고 청소년 인권 보장과 학교 민주화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두발·복장 제한과 체벌 철폐 △교육기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등급화, 자립형 사립고 철폐 △교과목수 축소, 선택권 확대, 특기 적성 및 동아리 활동 확대 △교내 성차별, 성추행 등 성 문제 해결 △부패 사립고교 추방,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화)02-755-8025
<http://www.get.to/students>

인권의 눈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은 없다

최종식/ 경기일보 기자

동양 최대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우선 이곳을 찾으면 국제 규격의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숙박시설, 야외공연장 등의 다양하고 잘 정돈된 시설에 놀란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감동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감탄사에도 불구하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분명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가 연일 계속되고, 각종 단체의 전시회가 열리지만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것은 역시 수영장. 그러나 이 시설도 청소년들의 이용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꼭 청소년들만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과후나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지 않는다는데 있다. 처음 시설을 개관할 때 시청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은 체육관에 콜라텍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이용한 도심권의 상시적인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상당한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개관 1년이 지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건물로만 남아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들을 불러들일 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신청한 프로그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고 강좌중심의 프로그램비 4천만 원을 편성했다. 웬만한 프로그램 하나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공단측의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결국 청소년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제음악제와 국제연극제에는 수억 원을 들이면서도 동양 최대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비 4천만 원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은 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밀히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해 세워진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이곳을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 늦기 전에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청소년문화센터 곳곳에서 울려 퍼지도록 나서야 할 때다.

인권단체들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 돌입

19개 단체들 28일부터 명동성당서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9개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실권 2대 현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로 오는 1월9일까지 단식농성과 함께 질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요구하고 2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인권단체들은 26일 임시국회까지 인

농성에 돌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이어지면서 이를 지원, 지지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오전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상시 단식 농성을 포함해 인권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연말 연시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다산**

김형 은 침소용 附日誌校문헌소용

김형 은 침소용 (서평)

김형은의 침소용은 우리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다. 이 책은 1900년대 초 김형은이 쓴 일기체로,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김형은의 민족주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김형은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의 민족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문헌이다. 또한, 이 책은 김형은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문헌이다. 김형은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 책은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김형은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 책은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김형은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 책은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이윤 상공산권 지회 법보단 을쳐근본인

이윤 상공산권 지회 법보단 을쳐근본인

이윤 상공산권 지회 법보단 을쳐근본인

이윤 상공산권 지회 법보단 을쳐근본인

이윤 상공산권 지회 법보단 을쳐근본인

다산인권

다산 인권

2001년 1월 ~ 12월

8호 ~ 50호

다산인권위원회

다산인권위원회

다산인권위원회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8호

2001. 1. 10. (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여운철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 humandasan@hanmail.net

“개혁입법 외면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인권활동가들, 13일간의 단식농성 풀며 국회의사당 기습 시위

지난 12월2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인권활동가들의 목숨 건 13일간의 단식농성이 9일 끝났다.

9일 농성 마지막 날 오전 10시30분, 농성단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3대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단식농성단도 이날 ‘우리는 계속 열음을 깨는 아침을 맞을 것이다’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의 단식농성 정리는 새로운 싸움의 신호탄일 뿐이다”며 “개혁 지체가 아니라 개혁의 시작조차 구경 못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공세를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눈보라 속에 기자회견을 마친 단식농성단 19명은 오전 11시50분께 국회 분수대에 진입,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근조국회’ 피켓을 앞세우고 3대 개혁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3일간의 단식농성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들은 목이 터져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인권활동가들은 경찰의 저지에 맞서 분수대 앞에 스크럼을 짜고 누워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했고 “개혁 입법 추진하지 않는 국회는 자폭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어 이들은 오후 12시 20분께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문정현신부는 민주당사 앞 쓰레기 차 위에 올라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울산인권운동연대 김석환씨의 안경이 깨졌으며, 최재훈 상황실장과 유가협 오영자씨가 쓰러져 강남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치료를 받았다.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이들은 오후 향린교회로 돌아가 평가모임을 가진 뒤 해산했다. [대신]

◆ 인권게시판 ◆

□다산인권센터가 지난 2일 이사했습니다

바뀐 주소와 팩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우) 442-380
팩스번호: 031-215-4395

□수원통일포럼

- 때: 1월18일 오후 7시 · 곳: 선경도서관 1층 강의실(031-215-6673)
- 주제: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본 남과 북의 평화와 교류협력 방안
- 참가비: 5,000원

영하20도 강추위도 그들을 꺾지는 못했다

농성단 찾은 국회의원들 잇따른 소금세례 맞고 발길 돌려

장기 농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동성당측의 방침 하에 천막 하나 치지 못하고 혹한 속 거리에서 목숨 건 단식농성에 들어간 인권활동가들. 2000년의 마지막 밤도, 새해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맞이해야 했다.

14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단은 칼바람 앞에 오들오들 떨며 굶주림과 싸웠다. 특히 초기에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이 적어 '그들만의 단식농성'이 되었다. 그 사이 영하 20도의 강추위와 20년만의 폭설이 이들을 덮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막식 전봉평화와 인권연대,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래군 농성단 상황실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매일 열린 오후 2시와 8시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지

난해 마지막날 밤 촛불집회에 200여명이 함께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새해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에 지지성명서를 발표하며 릴레이단식에 참여했다. 다산인권센터도 송원찬 사무국장 이 첫날부터 참여해 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지난 1월6일부터 송주현 인권부장이, 7일 저녁부터 자원활동가 노영란이 단식농성단에 합류했다. 단식농성단은 스무명에서 서른명으로 꾸준히 늘어갔다.

한편 지난 31일 오후 농성단을 방문한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하라"는 농성단의 성난 외침과 소금 세례에 발길을 돌렸다. 또 지난 8일 저녁 한나라당 인권위 소

속 5명의 국회의원들도 야유와 눈 세례를 맞으며 돌아갔다.

인권활동가들은 3대 입법을 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겨울 단식으로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13일 간의 목숨 건 단식농성단을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현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보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9일 농성단이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개혁을 향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앞 기습 시위를 마치고 명동성당에 모인 인권활동가들은 노곤한 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싸울 것을 확인하며 헤어졌다. **다산**

“내가 잘못 살아 젊은이들 고생하는디...”

지난 8일 저녁 민중가수들과 함께 한 촛불 음악회에서 단식 12일째인 유해정씨는 '문막식, 송원찬, 박래군 형들께 보내는 편지'에서 "솔직히 춥고 배고프지만 개혁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며 "형들의 고통은 우리와 함께 개혁을 향한 성냥이 될 것"이라고 밝혀 주위 사람들을 울렸다.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던 이들을 뿌리치고 단식농성을 벌였던 유가협 의 오영자 어머니(60)는 7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백병원으로 강제이송됐다. 그런데 다음날 밤 11시50분 명동성당 들머리 앞 천막을 찾았다. 도저히 집에 누워 있을 수 없어 식구들이 잠든 사이 빠져 나온 것이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딸 선영이가 죽고 젊은이들이 고생하는디 우째 가만히 방안에 누워 있을 수 있잔디...난 선영이로 살기로 했어. 그러니 돌아가란 말 하지 말어..." 어머니는 돌아가란 농성단의 간곡한 권유를 또다시 뿌리치며 짐을 풀었다. 지난 87년 민주화를 외치며 죽어간 서울교대생 박선영양의 어머니였다. 오영자어머니는 9일 단식농성단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로 향하던 중 몸이 안 좋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비롯해 6명이 13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고 릴레이단식, 동조 단식 등 모두 100여명이 단식에 참여했다. **다산**

인권의 눈

생명 앞에 자본의 논리 안 된다

한옥자/수원여성회 대표

오늘 아침 유난히 밀리는 한남대교를 넘다가 문득 창 밖을 보니 맞은 편 도로에 피가 흥건했다. 방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이가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차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한 줌도 안 되어 보인다. 오늘 아침 어쩌면 "아빠 다녀올께" 라며 집을 나선 어떤 아이의 아빠일수도, 병든 부모 형제를 대신해 배달을 하는 젊은이일 수도, 며칠 전 인수한 방앗간에서 직접 만든 떡을 배달하고 오는 방앗간 주인일 수도 있고... 유독 추운 날 길바닥에 널브러진 주검에 가슴이 저려왔다. 옆에 주인 잃고 버티신 오토바이는 꼼짝도 않는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 내가 난생 처음으로 생명과 이별하던 때가 떠올랐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나는 처음 내 손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아주 젊은 간암 말기 환자였다. 그는 목까지 차 오르는 복수로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우리 의료진은 젊은이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온갖 기구를 동원하고, 인공 호흡을 시키느냐고 올라타고, 분주히 오가며 다시 호흡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다. 몸에 설치된 기구를 제거하고 찢자국을 지우며 많이도 울었다. 죄책감에 오랫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그의 꿈을 본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도 수 차례 생명의 탄생을 목격한다. 이곳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어느 날인가는 아이만 남겨두고 산모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 옆방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 수정을 한 어느 부인이 가슴을 밀지로 해 무릎 꿇고 영당을 위로 치켜든 채 8시간째 자기와 싸움을 하고 있다. 방관이 터질 지경이지만 수정란이 잘못 될까봐 움직이지도 못한다. 결국 그 부인은 어려움을 거쳐 쌍둥이를 낳았다.

인체 이식이 본격화되면서 요즘 나오는 소설에서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간들의 부도덕한 인신매매가 등장하고 있다. 어느 소설에서는 심장 나쁜 대기업 회장의 생명 연장을 위한 심장 이식을 위해 이식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회사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쇠심줄보다 더 튼튼한 심장 소유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장기 기증서약을 하도록 한다. 그런 뒤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서 심장 이식을 하고 회춘하는 모습과 승진하는 살인자의 아무 거리낌없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첨단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혜택이 고루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소설에서 살 떨리게 그려놓고 있듯, 이미 생명은 공평하게 배정 받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이 행복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귀한 것이다.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전화/ 031-213-2105 팩스/215-4395
e-mail / humandasan@hanmail.net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9호

2001.1.31.(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수원 팔달구청 용역동원 노점상 강제단속...노점상들 생존권 보장 집회

“노점 단속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더 이상 갈 곳 없다. 삶의 터전 보장하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일대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점상인들이 시의 강제단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팔달구청은 지난 5일부터 팔달문 일대에서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에 들어갔다. 구청 측은 용역회사에 의뢰해 무력으로 밀어붙이기 식 강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끼니조차 해결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 일대 노점상인들은 구청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지난 29일부터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장사를 못 한지 20일이 지나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 방값이 없어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 기름값이 없어 냉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노점상인 70여명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사람답게 대우하라” “노점 단속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더 이상 갈 곳 없다. 삶의 터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을 세웠다.

노점상인들은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1월 초 갑자기 들이닥친 노점 단속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구의 단속은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팔달문을 중심으로 큰 도로 가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득 전노연수원지부연합회 조직부장(42)은 “큰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나이든 할머니들로 합지에 떨치나 된장 따위를 팔고 있다”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고 분개했다.

구청은 노점상을 불법인데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구청의 단속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98년 9월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점상이라도 하겠다는 자립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노점상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위배되는 행동이다.

전문가들은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인옥박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는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파악해 허가제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산**

다산인권센터 이전식 및 소장 이·취임식

다산인권센터가 새롭게 단장하며 올해 초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송원찬 사무국장이 2월1일부터 소장으로, 박진 정책실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지역의 인권지기로 올곧게 활동하겠습니다.

- 이전식 및 이·취임식: 2월10일(토) 오전 11시. 다산인권센터
- 주소: (442-380)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전화번호: 031-213-2105 □팩스번호: 031-215-4395
- 홈페이지: <http://rights.or.kr>(2월에 개통 예정)
- 이메일: humandasan@hanmail.net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찌라고”

서민 울리는 마구잡이 노점상 단속...생존권 보장해야

생존권은 뒷전으로 한 채 무턱대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바람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원 팔달문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어림잡아 300명 안쪽.

그동안 여인숙에서 기거해오던 올해 서른둘인 최종원씨는 그저께 방값을 지불하지 못해 거리로 쫓겨났다. “하루종일 기름냄새 맡아가며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20대 때 못된 짓을 해 징역을 살다가 98년 출옥했다. 감옥에서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출옥한 뒤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사회는 냉혹하게만 대했다. 98년 말부터 수원 팔달문에서 호떡장사를 하며 살아온 그는 “이 사회가 너무나 야속하

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철마다 이것저것 바뀌어가며 파는 정혁구씨(41)는 “도대체 노점상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지 엄동설한에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박살 낼 수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갖난아기를 둔 차영석씨(32)는 “그래도 젊은 남자들은 노가다라도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만 나이든 아주머니나 노인들은 정말 오갈 데 없다”고 말했다.

나라가 뒤집혀도 빼앗길 것 없는 노점상인들.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도록은 해 주어야지... 최소한 생존권은 보장해 달라!” 노점상인들의 악 받친 목소리가 겨울 하늘을 갈라놓았다. **다산**

인연단상

노점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IMF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생계를 위한 노점상이 늘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전체 노점상 가운데 적어도 20~30%는 하루 끼니를 위해 나선 이들이라고 한다. 또 이들 가운데는 독거노인이거나 막노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불편한 이들 또는 나이든 여성들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들은 연간 2억~3억 원의 돈을 들여 용역업체와 손잡고 이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노점상은 불법’이기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복지현실에서, 노점상이라도 해 끼니를 해결하려는 극빈층의 의지를 꺾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다.

노점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점상의 실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산**

인권마당

전태일·김상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

70년 22세의 나이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과 75년 유신 독재에 반대하며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과 부조리 그리고 악을 고발한다’고 외치며 할복자살한 서울농대생 김상진 군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70년대의 암울한 시대 노동운동과 유신독재에 맞선 항거로 목숨을 바친 두 사람의 민주화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30년 만에 구전(口傳)의 열사에서 법률상의 민주화유공자로 공인되게 됐다.

“고문 못 이겨 전향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26년 간 복역했던 장기수 김영식씨(67)가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전향했다면서 자신의 전향을 철회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김씨는 29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직적인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전향을 했다”며 “강제전향은 나의 의사가 아닌 고문에 의한 것이기에 전향취소를 명백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향철회는 99년 정순택, 유연철씨 이후 처음이다.

인권의 눈

'살색'과 인종차별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5일,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는 조금은 색다른(?) 시위가 열렸다. 경기도 성남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살색 없애기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크레파스나 물감에 나오는 '살색'이란 표현은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신문에 난 이런 내용의 사진과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쿵하고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식의 차별이 혹시 또 있지 않나 잠깐이나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이건 불법이건 모두 합해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가 같은 경제권속에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러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색깔구분법은 이제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는 민족적 배타성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폐쇄적 배타성의 근저에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공을 많이 받아온 우리민족의 외국인 경계심리가 남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전근대적 연고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배타성과 차별이 어디 '살색'표현뿐이라! 이들이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받는 갖은 불이익과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자, 수치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작년 여름 하와이에 갔을 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탕수수 밭에 임노동자로 끌려와 오늘날 그 곳에 터 잡아 살기까지의 힘겨운 노동이민 역사현장의 사연을 들으며 목이 메이던 생각이 난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차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전에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의 보편적 양식(良識),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는 21세기 첫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여성인권 무시한 성희롱 가해자 복직 결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성희롱으로 해고된 성남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회장 신연숙)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지노위가 피해여성에게 근무하는 직장내 가해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이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29

일 경기지노위의 결정에 제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가해자 이모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주임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귄 것으로 강요하며 "너는 내꺼야"라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동대표회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이모씨를 권고사직시켰다. [1면]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10호
2001.2.14.(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 humandasan@hanmail.net

'허울뿐인 인권위법안' 철회하라

민주당 인권위 권한 대폭 축소한 법안 결의...인권·시민단체들 대정부 투쟁 선언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당초 당정 합의 보다 대폭 후퇴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집만을 뒤집어 쓴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당정 협의안 발표에 이어 13일 의원총회에서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 △인권위원회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 △수사종결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피의자 및 증인 신문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인권위 시행령의 독자적 제정권한은 법무부와 협의의 통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바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배제한 누더기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확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완전히 배제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개혁의지를 상실한 현 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인권운동가 30여명은 김중권 민주당 대표면담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경찰로부터 얼굴을 네 차례 얻어맞는

등 인권운동가들이 폭행을 당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협의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족쇄를 채우는 반인권적인 개악"이라면서 민주당안을 철회하고 민간단체와 합의했던안을 즉각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인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1면]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

국보법질의서 25% 답변 ... 인권단체들 조만간 명단공개

지난 5일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인권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13일 현재 답변을 보낸 의원이 전체의원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썩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보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원들이 당론과 상관없이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모두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3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은 당을 막론하고 65명에 불과했으며 6명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단체들은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당론을 핑계대거나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성의함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조만간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답변서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1면]